

Left21.com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 제14호 | 값 1,800원

리포트21

친서민 가면극 악발은 오래 못 갈 것

부자 증세, 일자리 보장, 복지 확대야말로 진짜 서민 정책이다

최근 이명박의 지지율이 약간 오르면서 여기저기서 ‘이명박의 권력 기반이 안정된 것 아니냐’는 인상주의적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의 지지율은 약간 오르긴 했지만 임기 초 대통령령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다보니 고작 40퍼센트 정도만 되도 엄청난 지지를 받는 듯한 착시가 생겨난 것이다.

물론 곳곳에서 반이명박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민주노동당 등이 정권 퇴진까지 결의하던 7월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달라지긴 했다. 당시 반년 동안 이어진 MB악법 처리 실패에 우파들이 “이명박이 ‘이무현’이 되려는 것이 아니냐”(《중앙일보》대기자 김영희)며 압력을 넣자 이명박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강행했고 쌍용차 살인 진압도 추진했다. 그러자 우파는 결집했지만 대중적 반감과 반이명박 정서는 더욱 높아졌다. 무엇보다 상반기 내내 이어진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이명박은 반서민·우파 본질을 계속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8·15를 전후해 이명박은 친서민·중도실용이라는 가면を 썼다. 그리고 학자금 상환제 등 보잘 것 없는 생생내기식 ‘당근’들을 내놓았다. 이명박의 반서민·반민주 정책과 그에 맞선 투쟁이라는 진정한 쟁점을 흐리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뜬금없이 지역주의 해결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등의 카드도 꺼내



역겨운 ‘친서민’ 쇼 서민 등 두드리면서 복지예산 삭감 칼 꽂는 이명박

놓았다.

당시 뉴라이트들은 “중국집에서 스파게티를 내놓는 것 같다”며 친서민 정책에 반발했고 《조선일보》도 “대통령의 친(親)서민 행보에 맞춰 ... 복지성 예산 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지기반 붕괴에 시달리던 이명박은 ‘서민 프렌들리’라는 포장지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실체를 가려야만 했다. 이것과 최근 지표상의 경기 회복이 맞물려 지지율의 반등이 나타난 것이다.

‘서민 프렌들리’?

우파들은 이명박 지지율 반등에 안도하면서도 이런 포장지가 개악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이 정작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국정 목표에 장애가 ... [된]다면 애기가 달라진다”(《중앙일보》논설위원 김중수)는 것이다. 《조선일보》김대중도 “‘쇠고기 파동’ 때 텔 대로 텐 [데다] ... 대통령의 포퓰리즘까지 얹혀져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 슬슬 그 윤곽이 흐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겉포장만 바꿨을뿐 반서민·반민주라는 이명박의 알맹이는 그대로다. 입으로는 친서민을 말하면서 뒤로는 빈곤층, 비정규직, 청년실업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 내년

최저생계비를 역대 최저인 2.75퍼센트만 올려서 물가 대비 사실상 삭감시킨 것은 친서민과 거리가 멀다. 전월세 대란을 부추겼고 아직도 용산참사 유가족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부가 ‘서민 보금자리 마련’을 떠드는 것도 역겹다.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해 이메일 뿐 아니라 웹서핑, 메신저까지 감청하며 마녀사냥을 준비하는 반민주적 우파 정부가 ‘중도’를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다시 열리자 한나라당은 마스크법, 사이버모욕죄 등 ‘MB악법’ 날치기 모색도 다시 시작했다. ‘북한의 임진강 수공’ 운운하는 우익들의 준중도 심상치 않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고, 거품을 키우는 데 쏟아 부은 돈을 메우기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피를 계속 뿜어야 하고, 그러려면 사람들의 눈·귀·입도 계속 틀어막아야 한다. 따라서 친서민·중도의 가면을 쓴 정부 아래서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사극의 악발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일말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면 이명박의 정치 위기는 더 심해질 것이다. 진보진영은 기만적 유희 시능과 현 상황의 모순을 반이명박 주장과 투쟁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전지윤 기자 | ratn71@left21.com

▶ 관련기사 3면

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주가와 부동산은 이미 지난해 위기 전의 가격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일부는 이제 올해 안에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경기가 회복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속되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는 “회복 국면으로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 지적한다. 실업률이 오르고 수출이 줄어드는 추세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경기 회복은 정부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매우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완성차 판매 회복은 5월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책(차량 교체 시 세금 감면) 덕택이다. 5~7월 총판매량은 증가했지만 월별 판매량은 7월부터 다시 하락하고 있다.

7월 기계 수출액이나 건설 수출액 역시 공공부문의 발주가 늘어 다시 증가할 수 있었다. 민간부문의 발주는 큰 폭으로 줄었다.

그 결과, 지금 정부는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1백85조 원을 7월까지 다 소진했다.

무역수지 흑자 역시 올 상반기까지 지속된 고환율, 저유가 덕분이었다. 환율이 1천2백 원대로 내려오고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 효과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 재정으로 거품만 키우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져간다. 그렇다고 출구 전략을 개시해 거품이 터지면 지난해처럼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도 딜레마다. 정부 지출은 늘었는데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이런 딜레마들을 돌파하는 길은 평범한 다수에게 위기의 대가를 전가하는 길 뿐이다.

지난해부터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화, 버블세븐 해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 제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거 해제했다. 이는 조저금리와 맞물

려 부동산 거품이 다시 커지는 걸로 나타났다.

이것이 전월세 대란의 주범이다. 집값이 뛰니 전월세 임대료도 뛰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서민 밀집 지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조차 전세가가 1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고, 빛은 늘고

뉴타운 동시 재개발도 영향을 미쳤다. 세입자들의 전월세 수요가 대거 늘어났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학가 자취방도 월세 보증금과 사글세가 갑절 가까이 뛰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1층에서 반지하로, 3층에서 옥탑방으로 옮겨야 한다. 그도 아니면 아예 직장 학교에서 더 먼 도심 외곽으로 떠나야 한다.

더구나 계란, 두부, 닭고기, 유제품, 어묵 등 서민 식품의 가격이 날개를 달았다. 요샌 반찬거리 두세 개 사면 만 원에서 동전 몇 톨 겨우 남는다. 올해 식료품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평균 9.5퍼센트

로 지난해의 갑절이다.

물가와 전월세가 올라도 소득이 함께 오르면 버려 볼 용기라도 낼 텐데. 문제는 소득마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5백2조여 원인 반면, 가계대출 총규모는 6백97조 원이 넘는다. 소득 증가율은 사상 최저이고 부채 증가율은 사상 최고다. 돈이 없다고 안 먹고 안 쓸 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게 올려 실질적으로 삭감해 버렸다.

반면, 강부자 정권답게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특별소비세를 모두 인하했다.

요컨대 경기 회복은 멀었고 그나마 정부의 재정 투자도 부자와 대기업에 몰리고 있다.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친부자 정책은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경제 위기에 대한 좌파적 대안이 절실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의 빈곤 대책이 단순히 현금 지급식이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금 지급식 복지는 오히려 더 늘어야 한다. 조건 없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최저 임금과 최저 생계비를 대폭 인상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 규제를 강화해 물가를 통제해야 한다.

강력한 부동산 보유 규제로 주거권을 보장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레프트21》이 제시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 시대에 더 나은 삶을 실현하려면 대중적인 저항에 나서야 한다.

김문성 객원기자 | enlucha@left21.com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비상 대책’으로 쏟아 부은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것. 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낮췄던 금리를 다시 인상한다.

종합

세상을 움직이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정운찬 장관은] 12척의 배를 몰고 왜군을 격파한 이순신 장군과 같다”

한승수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할 일은 ...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다”

정운찬

“술은 먹었지만 음주는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 사업은 다르다’는 정운찬에 대한 네티즌 반응

“서민이기만 하면 웬만큼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구도 다 들어준다는 식이다”

〈중앙일보〉김중수의 불만

문 : “만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다면?” / 답 : “MB OUT”

이외수의 백문 백답

“무전골골 유전백세” 신종플루에서도 나타나는 계급 격차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우려했던 북한의 수공(水攻) 작전이 현실로 드러났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계락을 간파하고 평화의 댐을 만든 것이다”

임진강 사고에 신난 뉴라이트의 기자회견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이 밝혀진 지 19년 만에 다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됐다. 기무사는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엄윤섭 당원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사찰 대상자들의 집과 사무실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모습도 촬영했다. 심지어 식사로 불고기과 함흥냉면을 먹고 찻집에서 고구마를 먹은 것까지 기록할 정도로 철저하게 일상을 감시했다.

이뿐만 아니다. 재일동포 학교에 책을 보내며 한국어 공부 지원, 한국 문화·역사 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 ‘뜨겁습니다’의 회원과 그림 작가, 출판사 관계자도 기무사의 사찰 대상이었다.

노래패 ‘우리나라’도 공간기관의 사찰 대상이었다. 재일동포 학교 공연차 일본에 간 ‘우리나라’의 공연 장면을 채증하도록 지시한 문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무사에 질세라 국가정보원도 민간인 사찰에 열심이다. 쌍용차 파업 지지 집회에서 기무사 직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요원도 불법 채증을 했다.

국정원은 또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실시간 감청하는 ‘패킷 감청’을 하기도 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이 인터넷에서 무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 반대 기자회견

사진 제공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엇을 열어 보고 읽고 쓰는지 통째로 엿보고 감시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일부 활동가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을 더한층 일상적으로 사찰, 감

기무사 사찰 피해자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인터뷰

“진보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히 대응해야”

“최근에 불거진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기무사 사찰 내용을 보면, 주요 도시 자체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사찰하는 것이죠.

사찰 동영상을 보면 금천, 관악 지역이 나오고 1, 2, 3, 4로 표시

해 났어요. 그리고 지역의 담당자 이름을 적어 놔죠. 정말 일상적인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한 기관에 정보를 의존하게 되면 그 기관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정을 붙이면 견제도 할 수 있고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군대, 국정원, 이 3각 구도가 되는 것이죠. 국정원의 패킷

감청, 경찰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군의 사이버방호사령부 모두 이것의 연장선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간기관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길일 텐데, 제대로 대응을 못 하니까 지금 저들이 더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조직 사건이 터진 것은 아

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예컨대 IMF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 초기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자수는 전두환, 노태우 집권 초보다 오히려 많았다.

기무사를 비롯한 공안 기관이 민주노동당 활동가를 비롯해 총련 계열의 교포학교를 지원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를 계속 사찰한 점은 친북이라는 굴레를 덧씌워 조직사건을 터뜨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을 준다.

이명박 정부가 더한층 강화하는 사찰과 통제에 맞서 진보진영은 사상과 정파를 떠나 단결해 싸워야 한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니지만 국정원, 경찰, 기무사 이들의 카드가 뻗어 보이죠. 진보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플루 — 치료제 강제실시가 당장 필요하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신종플루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마가렛 찬은 신종플루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에 이어 콜롬비아 대통령도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브라질에서는 현지 시장이 신종플루에 걸려 사망했다.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는 무려 2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신종플루 증세를 보였다.

한국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40세인 젊은 여성이 신종플루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져 사람들의 공포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엉망진창이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아끼기 위해 ‘고위험군’과 중증 환자에게만

투약하고 그나마 그것도 뒤늦게 투약해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타미플루는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후, 폐렴 진단까지 받은 지 이틀이 지나서야 타미플루를 투약받을 수 있었다.

신종플루 환자 중 고작 절반만이 48시간 안에 타미플루를 투약받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타미플루 보유량이 적어서 ‘대유행’ 단계가 오자 치료용으로 쓰기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대처능력에 한계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가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는 신종플루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신종플루는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고, 사망자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왜 정부가 위기 단계를 ‘경계 2’로 격상했겠는가.

거짓말

치료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 국민의 11퍼센트인 5백30만 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20퍼센트 분량을 확보하겠다고며 큰소리쳤다. 하지만 실제 투경을 열어보니 고작 국민의 5퍼센트도 채 안 되는 1백95만 명분밖에 없었다.

앞으로 신종플루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게끔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온다. 백신이 제대로 된 집단 면역을 제공하는

것은 내년여야 가능하고, 여전히 치료제는 전 국민의 5퍼센트밖에 없다.

따라서 대재앙을 대비하려면 지금 당장 치료제 강제 실시가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관료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강제실시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돈 벌이를 하는 로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중지하고 재앙을 막아야 한다.

관/련/포/럼/소/개

대학 맑스주의 포럼
신종플루 ‘대란’ —
왜 21세기에도 전염병이 도는가?

연사 : 우석균 _ 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9월 17일 (목) 오후 7:00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서관) 316B
주최 : 대학생 다함께
참가비 : 2천 원 | 문의 : 010-5527-2331

서울 남부 사회포럼
우석균이 말하는 신종플루의 진실 —
왜 21세기에도 전염병이 도는가?

연사 : 우석균 _ 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9월 16일 (수) 오후 8:00
강남스타디 6층 (강남역 6번 출구 원번 외환은행 건물)
주최 : 다함께 서울 남부지구 | 참가비 : 4천 원
문의 : 010-5784-3174 (강남·서초·관악·동작)
010-5784-3175 (강동·송파)

의료민영화가 낳을 참상이 드러나다

한국의 의료기관 중 90퍼센트는 민간의료 기관이다.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11퍼센트로 영국(96퍼센트), 이탈리아(79퍼센트), 프랑스(65퍼센트)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신종플루의 전염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격리병상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국가 지정 격리병상은 1백97병상에 불과하다. 환자가 수천 명이 발생했는데 고작 1백97명(!)만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의료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 또 4대강 삽질을 위해

내년 공공보건의료예산 12.4퍼센트와 인천공항의 격리시설 건립을 위한 신규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 한다. 심지어 보훈병원과 적십자병원은 신종플루 거점 병원으로 지정해 놓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의료급여 혜택이 없는 빈곤층 4백10만 명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12만 원이나 하는 신종플루 검사비 때문에 진단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인데, 이처럼 공공 의료 파괴가 진행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뻔하다.

형편없는 보건의료 체계에조차 속하지 않는 노숙자나 이주노동자 같은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빈곤과 불평등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 보스턴 보건당국의 조사에서도 가난한 흑인은 이 지역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되지만 신종플루 감염 환자의 37퍼센트나 차지했다.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가가 가난한 서민들을 무상으로 검사하고 치료해 줘야 한다.

플라주 ⑩

플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일루전

정치



사진 제공: 민주정의소리

서울대 총장 시절 본고사 부활과 입시 지옥 강화를 추진한 정운찬을 비판하는 참교육학부모회

겉만 번지르한 정운찬 포장지 내각의 실체

친서민·중도 사기극이 효과가 있으려면 '강부자 내각'의 명예를 벗어나야 했다. 그래서 이명박은 중도·개혁 이미지의 정운찬을 총리로 내세운 개각을 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정운찬은 이런 포장지 구실에 제격이다.

그러나 정운찬의 알맹이는 이명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운찬도 “그 분[이명박]과 나의 경제 시각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분야는 교육이다. 정운찬은 서울대 총장 시절 “교육의 목적은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숨아내는 데도 있다”며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에 반대하고 고교평준화 폐지와 중·고교 입시 부활까지 주장했다.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켜지는 시장의 틀과 게임의 룰을 갖춰야 한다”며 “노동 시장은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게 정운찬의 ‘케인스주의’다. 2004년에 서울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접거

농성을 하자 정운찬은 “학내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며 징계를 지지했다.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정운찬은 “터무니 없는 소리인데 ... 재계약에서 탈락된 우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유연한 호환성

정치인으로 출세를 모색하면서 정운찬은 “총청인이 나라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 왔다”며 지역 감정 조장도 서슴치 않았다. 대운하에 반대하다더니 총리 지명 후 “4대강 정비 사업은 수질 개선 문제 때문에 쉽게 반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도 재빠르다.

정운찬이 “민주당과 연애하고 한나라당과 결혼”한 것은 ‘변심’이라기보다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통점에서 비롯한 유연한 호환성으로 봐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에서 총청 맹주를 차지하며 대권을 노린다는 정운찬의 구상은 이후 인기없는 이명박과 선을 긋고 충돌할 수 있는 불씨를 담고 있다.

이번 개각의 나머지 인물들은 그럴듯한 포장조차 없다.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며 해외 파병에 적극 찬성해 왔고, ‘대북 선제공격’ 발언으로 남북관계에 재를 뿌린 호전적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 이귀남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목한 삼성 ‘떡값 검사’ 중 하나로 용산 참사 때 법무부차관으로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설치던 자다. “집회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여성 억압이나 차별에 대한 어떠한 활동도 없었고 단지 “한식 세계화와 가정의 가치를 높이는” 일만 해 온 ‘식생활 전문가’ 백희영을 여성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여성은 밥이나 하라’는 이 정부의 철학을 보여 준다. ‘친기업·반서민 MB노믹스의 화신’인 강만수의 컴백과 이동관 돌려막기도 짜증나는 일이다.

전지윤 기자 | ratm71@left21.com

민주당에 대한 진보진영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목소리만 높이다가 어느 순간 어정쩡하게 물러서고 타협하는 민주당이 없었다면 이명박의 개각 강행과 친서민·중도 사기극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쌍용차 파업 때 민주당은 상하이차에 매각한 원죄 속에 노동자들에게 양보 압박이나 넣었다. 언론악법 날치기 때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내걸고 장외투쟁하는 시늉을 좀 하더니 최근에 다시 ‘물지마’ 등원을 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벌써 “서민들도 싸우기만 하는 정당을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그들의 계급적 기반과 정책 노선이 이명박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 열우당 의원 임종인은 “경제 정책에서는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정책통이 저에게 직접 해 준 이야기”라고 말했다.

노무현·김대중 조분 정국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국제 에디터의 지적처럼 지난 10년간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부패와 무능, 배신이 있었으며 시장의 폭력이 있었고, 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10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대안도 못 내놓고 있다. 강원택 교수는 “민주당 플랜은 발표 이후 당내에서 극심한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졌고 ...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이제 민주

당은 닭 쫓던 개와 같은 신세”라고 평했다. 민주당이 확고한 반이명박 대안이 되지 못하자 민주당 밖에서 이해한·한명숙의 ‘시민주권 모임’이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중간쯤”에 있다는 친노신당 등이 만들어졌지만 이들도 분명한 정책과 노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정쩡

따라서 진보진영은 MB악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하면서도 이명박에 맞선 전략적 대안 건설에서는 민주당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반이명박 투쟁에서 불철저하고 일관되지 않은 민주당을 추수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될 수”있다는 “온 힘으로 공격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약화됐느냐”는 최장집 교수의 제기는 틀렸다. 민주당은 이명박을 온 힘으로는커녕 제대로 공격하지도 않았고 진보진영이 이를 추수한 틈에 이명박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두 차례 정권을 구성했던 그룹들은 나름의 민주주의와 개혁의 성과를 끌어냈으며 ... 미우나 고우나 민주화 세력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며 “진보와 개혁의 선긋기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의 주장(‘보수 우위 시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활로’)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은 이명박에 맞선 대중투쟁 건설보

다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선거 연합 추진을 더 중시한다. 물론 예전처럼 노골적인 ‘비판적 지론’이나 민주대연합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낡은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사회·경제 민주화 연합’(노화한 진보신당 대표)이나 ‘혁신 세력 연합’(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정도로 내부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발전되고 성숙한 연합이 가능하다”(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고도 한다.

그러나 비록 몇 가지 정책에 바탕해 지역에 따라 선택적 연합을 하더라도 포괄적 강령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합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진보진영의 독립성을 해치고 진보적 대안의 삭감과 축소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해외 파병, 한미FTA 등에서 진보적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런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은 진보진영이 민주당을 추수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회피·통제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상반기 비정규직·언론악법 저지 투쟁에서 드러난 문제였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명박의 개각에 맞선 대중투쟁 건설을 분명히 하면서 사안에 따라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하지만 전략적·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선거에서도 이명박에 맞서면서 민주당과도 다른 진보적 선거 대안 건설에 힘써야 한다.

전지윤 기자 | ratm71@left21.com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은행들은 이 일을 잊은 듯하다. 은행들은 수익을 부풀리며 다시 기를 펴고 있다.

이런 현실이 지난 주말 런던에서 열린 주요 스무 나라(이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문제가 됐다. 이번 회의는 이달 말 피츠버그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준비 절차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의 수장들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세 번째 모이는 자리다. 이는 이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런던 회의에서 모든 이가 주목한 쟁점은 국가가 은행권의 보너스를 규제할지 말지였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미국·영국처럼 거대 금융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은 반대했고, 프랑스·독일 등 대다수 유럽연합 국가들은 찬성했다.

그러나 논쟁은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은행들은 자기들의 상투적 수법을 쓰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주 <뉴욕 타임스> 일요일치에 요상한 기사가 실렸다.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은행들이 생명보험 계약을 매입해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세계 금융계를 강타한 2007~2008년에 하던 짓[이 때는 주택저당증권을 부채담보부증권으로 묶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과 똑같다. 한 투자은행가는 <뉴욕 타임스>에 “우리는 투자자들이 구름떼처럼 모이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번 경제 위기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다. 게다가 수익과 보너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기를 쓴다.

오만

그래서 영국금융감독청장 아데어 터너가 외환 거래에 토빈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던 것이다.

저명한 주류 인사들도 은행들의 이런 오만한 태도에 언짢아 한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의 ‘시장’란 편집자 길리언 테트는 이번 위기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 은행가들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다. “금융인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습성을 제대로 고치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의 회생은 오로지 정부가 개입한 결과다. 중앙은행들이 금융권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은행들을 떠받쳤고, 이 덕분에 수익이 나는 듯한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 사실은 G20이 마주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과연 위기는 끝났는가? 주요 경제권은 지난 겨울 1929~1930년 대공황 초와 맞먹거나 더 빠른 속도로 수축했다.

수축률이 둔화했고 몇 군데에서는 아예 수축이 멈췄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주요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은 결과다.

예컨대, 중국 은행들은 정부의 지시를 따라 올 상반기에만 1조 달러 넘게 대출했다. 바르레이스캐피탈의 분석을 보면, 2009년 4월~6월 세계경제 산출 증가는 모두 중국 덕분에 있었다.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거대 수출 경제국들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빨리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말해 준다. 그들의 핵심 시장은 중국이다.

이처럼 국가가 재정 지출한 덕분에 회복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 위기 전에 파국을 예언한 것으로 악명 높은 누리엘 루비니는 “더블딤”에 빠질 위험을 경고한다. 즉, 현재의 회복 뒤에, 아마도 내년 말쯤 경제가 다시 폭락할 것이라고 말이다.

루비니는 지금의 회복이 매우 허약한데, 이는 금융 체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정부가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너무 일찍 철회하면 세계경제가 다시 폭락할 것이다. 이것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행정부가 저지른 실수였다. 당시 경제는 1937~1938년에 혹독한 침체를 겪었다.

따라서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한동안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번역 차승일

종합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안산 상록을 임종인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지지하며

10월 28일에 경남 양산, 강원 강릉, 경기 안산 상록을 세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을 예정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반이명박 정서를 진보진영 쪽으로 수렴시켜야 한다. 그 점에서 경기 안산 상록을은 진보진영이 단결해 선거 도전을 해볼 만한 곳이다.

이 선거구에는 임종인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임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공식 지지했다.

우리도 임종인 후보가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 임 후보는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의원이면서도 민주노동당 의원 못지 않게 진보적 의정 활동을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비정규직

법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했다. 2007년에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당시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진보대연합 논의에도 참여했다.

묘한 상황

물론 이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문제가 있다. 현재 민주당도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임종인 후보가 맞붙는 2파전이라면 임종인 후보의 승리는 99퍼센트 ‘파 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까지 포함하는 3파전이라면 표분산 효과 때문에 결과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

이런 묘한 상황이 빚어내는 난처함(민주당과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바라는 민주대연합론자 모두의)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선거 구도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인 후보가 민주당과의 연대에 미련을 버리

지 못하는 태도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임 후보는 “사회경제정책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다”고 옳게 비판하면서도 진보개혁대연합 전략의 필요성을 말한다).

먼저, 임 후보가 민주당과의 연대를 말할수록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흐릿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다 민주당 후보가 덜컥 단일 후보가 된다면 실로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닐 것이고, 임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 정책의 온건화 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종인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지지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임종인 후보의 모호한 태도를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인식 | kis@left21.com



지난해 촛불항쟁 때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삼보일배하는 임종인 후보(오른쪽)

사진 <레프트21>

‘(가칭)MB독재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출범에 부처

이명박 퇴진을 위해 진보민중 진영이 단결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정권 퇴진 요구로 모이고 있다.

지난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단체연합(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다섯 대중단체가 공동 발의해 ‘(가칭)MB독재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 건설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기층의 대중조직과 진보민중 진영이 사안별 연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공동투쟁을 전개하자”고 밝혔다. 그리고 “막무가내식 일방주의를 포기할 의사도 없고, 정책 전환 가능성도 없는 이명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남북평화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진보민중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을 공식화하면서 ... 자신의 계급적 요구와 퇴진 투쟁에 대한 요구를 결합시키고 구체적 실천들을 확대하며 정권 퇴진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동 발의한 다섯 단체를 비롯해 다함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당(준),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민

중 진영의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참여자들은 모두 “MB 퇴진을 목표로 하는 진보민중 진영의 공동투쟁본부”를 건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오는 9월 22일(화)에 ‘공동투쟁본부’가 닳을 올리게 된다.

저항의 구실을 구축하기

‘공동투쟁본부’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분노해 점차 확산해 온 ‘MB 퇴진’의 염원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진보진영의 연대체가 되길 희망한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조직력과 동원력을 갖춘 민주노동당과 대학생, 청년 단체 등이 이명박 정권에 맞선 저항 운동의 중심 구실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중도실용 정책, 정운찬 총리 기용, 남북 관계의 일시적 개선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에 벌어진 용산참사 항의 운동, 민주적 권리 수호 운동, 쌍용차 투쟁 등 진보민중 진영의 강력한 저항의 결과이자, 10월 재보궐 선거와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 강경 탄압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지배계급의 선거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통치 전략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의 근원인 경제 위기는 여전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저항의 확대를 막기 위해 반민주악법을 강행하려 한다. 또, 비정규직법 개악,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4대강 사업 등도 여전히 밀어붙일 태세다.

따라서 진보민중 진영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단결하고 대중적 저항 운동을 건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워크숍에서 신승철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5만~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단호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공동투쟁본부’는 바로 이러한 투쟁을 벌이기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장 조직력 있는 민주노동당 조합원들을 실제로 대규모로 조직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곧 닳을 올리는 ‘공동투쟁본부’가 ‘MB 퇴진’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실질적으로 모아내고 대중운동을 벌여 나가는 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성환 다함께 운영위원



반MB 9·29 총궐기를 선포하는 대학생들

사진 <레프트21>

대학생들이 이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운동을 시작하다

9월 8일,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는 이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을 대학생들 속에서 대규모로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연대 공동 상임대표이자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원기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서민이 존재하는가”하고 비판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용산참사 역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 쌍용차 노동자들은 구속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학생들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주장했다.

행동연대 공동 상임대표이자 대학생 다함께 대표인 김지윤 씨도 “이명박이 열어젖힌 것은 국민성공시대가 아니라 부자성공시대, 서민절망시대였을 뿐”이고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선물하면서 서도 최근 비정규직 강사 대량 해고 문제나 쌍용차에서 보듯이 서민들에게

는 경제 위기 고통과 대량 해고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 운하며 한낮에 대학생들을 대공분신까지 끌고 가는 이 정부에 맞서 대학생들이 나서자”고 호소했다. 김지윤 씨 말대로, “선언 운동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 운동은 전국 63개 대학에서 9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21개 대학은 이명박 정권 불신임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언운동이 끝나는 29일에는 대학별 집회 후 서울과 지방 주요 거점에서 동시다발로 총궐기를 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학생들이 불신임 선언과 29일 총궐기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한다.

서범진 대학생 행동연대 공동상황실장, 대학생 다함께 정치위원

농민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는 전적으로 옳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8일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진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농의 주장은 쌀 풍작으로 쌀값 폭락이 벌어져 농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를 해소하고 북한 식량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전농은 ‘쌀 대란’을 막기 위해 쌀의

‘완전 시장 격리’를 요구해 왔다.

시장 논리를 거부하고 식량을 국제적으로 재분배하자는 주장은 매우 좋은 발상이다. 이는 한 쪽에선 식량이 남아 돌아 문제가 생기고 한 쪽은 식량이 없어 굶주리게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훌륭한 도전이기도 하다.

너무 많은 쌀을 생산해서 오히려 가난해지는 농민, 굶주리는 사람들의 맞은 편에서 팔리지 않고 썩어 가는 식량만큼 자

본주의의 모순을 보여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왜 노동자·농민 등 직접 생산자가 통제하는 민주적 계획 경제가 필요한지도 명백히 보여 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북한은 ... 6백만 명 이상이 올 가을 추수 때까지 식량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즉각 전농의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김문성 객원기자 enlucha@left21.com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

작년 촛불항쟁 이후, 촛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등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 퇴진론, 반독재 국민전선론, 선거 심판론 등 민주주의 후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 진보진영 내에 주요 화두가 됐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 체제, 특히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대해 주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현 체제를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다.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견해는 현 정권 하에서 강화한 반민주적 탄압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견해는 한편에선 정권 퇴진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선 민주당을 포함한 광범한 민주대연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로 규정하는 견해는 반민주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권이기 때문에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투쟁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독재론

우선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정권을 독재라 비난하는 대중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수많은 대중이 끔찍한 군사독재의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독재 정권의 후신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니 독재를 연상시킬 만하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를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이다. 이런 성격은 전임 정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점에서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형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공히 자본가들에 의한 독재라고 규정해왔다.

그러나 본질상 자본가 계급에 의한 독재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다양한 국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그리고 권위주의는 다시 군사 독재, 파시즘, 국가 자본주의 등 여러 국가 형태로 나뉜다. 국가 형태의 문제로 보자면, 현 정권을 1980년대식 독재나 심지어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이명박 정권이 분명히 군사 독재 후신 정당이 창출한 정권이긴 하지만, 그들이 현재 이 나라를 군사 독재 상황으로까지 후퇴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김대중과 같은 부르주아 야당 정치인들조차 선거 출마를 제약받고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지만, 현 정권이 그런 수준으로 부르주아 야당을 탄압하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오늘날 자주적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의 결성 자체가 봉쇄된 상황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 체제는 권위주의 요소가 남아 있지만, 준(準)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민주화 동력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역대의 통치자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한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부르주아



2009년 6월 13일 대한문에서 열린 “국민을 때리지 마라” 집회

사진 이미지

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이 노동 계급의 조직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한 타협의 산물이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 트로츠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은 노동 계급 대중 조직”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민주화 동력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도 지식인들도 아니라, 노동 계급의 투쟁과 조직(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었다.

애초 한국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국가 자신이 급속한 자본 축적을 일사불란하게 지도하기 위해 매우 억압적인 정치 체제로 출발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는 동안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와 결합된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이 진행됐다.

이러한 급속한 축적 과정은 한편에서 재벌과 같은 대자본가 집단을 형성했다. 그러나 자본 축적은 다른 한편에서 엄청난 규모의 노동자 계급을 창출했다. 이들은 생활 조건을 둘러싼 투쟁과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에 도전했다.

특히 1987년은 전환점이었다. 1987년 학생을 선두로 하고 노동자들이 동참한 6월 항쟁은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노동 계급이 곧장 7월부터 9월까지 작업장에서 권리 개선을 요구하며 연쇄적으로 투쟁에 나서면서 지배 계급이 감히 반동을 시도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노동 계급의 조직(노동조합, 노동자 정당)들과 그들의 투쟁이 바로 그 이후의 민주화 과정의 동력이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자본가들은 19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에 맞서 연인원 3백만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의 대중파업과 IMF 공황 직후 노동자들의 전투적 저항을 겪으

며,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노동자 정당 건설을 용인하게 됐다.

모순되고 불안정한 민주화 과정

1987년 이후 노동자 투쟁과 조직화라는 동력 덕분에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해왔지만, 이행 과정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정치 학자들과 일부 좌파 정치학자들은 그동안 1987년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1997년 선거에서 자유주의 야당 출신 정치인이 집권한 것을 계기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우파 정권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제 안정화 단계로 진입해야 마땅할텐데, 오히려 고작 10년도 안 돼 역행할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많은 학자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에 주목했다. 그래서 최장집 교수나 손호철 교수 등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중심적 과제가 돼야 한다거나,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구도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물론 노동 계급의 입장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 급속한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을 위해 노동 계급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들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도 제약해야 했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과제는 긴밀히 연관돼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것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중요

하다고 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상 탄압법인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했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수시로 제약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우익들에 의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경험한 바 있고,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반민주적 탄압이 강화된 상황도 접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한국의 정치 체제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못 미치는 매우 모순되고 불안정한 준(準)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불과하고, 민주화 과정 자체가 안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치 체제가 갖는 이와 같은 불안정성은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에서 준(準)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모순 때문이다.

한편에선 국가가 강력히 지도한 급속한 산업화 결과 사적 대자본의 경제력이 증대하고 다양화하면서, 국가와 자본 간 긴장이 첨예해지고 자본 분과 간 갈등도 빈번해졌다. 다른 한편에선 엄청난 착취와 억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강력한 노동운동이 형성됐다.

이 때문에 지배 계급 내의 갈등과 자본과 노동 간 갈등 모두가 빈번하고,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포섭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억압 기구를 동원한 탄압과 공작 등 여러 무리수들이 따르곤 한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이명박 정부가 용산 참사, 쌍용차 진압 등 노동자 민중 운동에 대해 살인적 폭력을 가하는가 하면,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처럼 지배 계급 내의 갈등 문제에도 무리수를 둔 것은 이런 점을 잘 드러낸다.

이명박 정부 하의 민주주의 투쟁

따라서 민주화 과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1980년대 군사 독재 수준으로 억압을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수준의 반동은 노동자 투쟁이 심각한 패배를 겪고, 노동 계급의 대중조직들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황에서 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성과를 후퇴시키려는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노동 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독재 파소론을 비판하는 상당수 개혁주의 지식인들이 이명박 정부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민주주의 제도 내에 존재”(김윤철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한다며, 반정부 투쟁을 자제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화의 동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올해 초 울산 재보선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 당선한 것,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한 성과조차 지난 해 촛불 항쟁의 여파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오히려 정권의 성격에 대한 분석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민주노동당·민주노총·한대련 등이 반민주적 정권인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하려는 시도야말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조직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1987년 이후의 변화가 보여 주듯이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 투쟁만이 민주화의 진정한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 영남대, 부산대, 한국외대, 성공회대 등 전국 대학에서 해고 바람이 몰아쳤다. 4학기(2년)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들이 집단 해고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5천~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당국들은 2년 이상 강의한 시간 강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해고가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조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 강사들은 애초에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정규직화조차 요구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비정규직법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주 3~6시간 강의를 배정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대량 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결코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도 드러냈다.

7만여 명에 이르는 시간 강사들은 이 나라 대학 강의 절반가량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며 전임 교수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고달픈 신세다.

이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은 주 6시간을 강의한다고 해도 월 1백만 원(1시간 강의료 4만 원 기준)이 안된다. 그야말로 ‘중년 88만 원 세대’다.

이마저도 방학엔 강의가 없으니 못받는 셈이다.

기자가 인터뷰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려대 분회장 김영곤 씨는 “대학이 내게 주는 건 연봉 4백80만 원과 교수대출증뿐”이라고 말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6개월에 한 번 씩 재계약 해야 하는 처지와 교수 사회에서 한 번 눈 밖에 나면 영영 전임 교수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 이번 대량 해고에 맞서 투쟁에 나서는 시간 강사들이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시간 강사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학 당국들은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할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그

러나 과연 그런가?

“사립대학이 쌓아 놓은 적립금만 6조 원을 넘어섰다. 평균 연봉이 1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시간 강사에게 연봉 3천만 원 정도를 보장한다고 할 때 20만 명의 시간 강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다.”(《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이후)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젊은 강사들이 운동권 학생들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1970년대에 시간 강사에게서 박탈한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지위의 부재가 시간 강사에 대한 ‘황포’의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시간 강사들에게 바로 교원지위를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막고 나아가 처우를 개선하려면 대학 당국과 정부를 강제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시간 강사들이 처한 악조건 때문에 쉽게 투쟁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는 살인적 등록금을, 시간 강사들에게는 형편없는 ‘일용잡급직’을 강요하는 대학 당국과 정부에 맞서 학내 구성원들의 지지와 연대가 중요하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2009년 9월 7일 고려대학교 강사 해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

사진 이윤선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지난 8월 24일 부산대학교 당국이 부산대 비정규 교수 70여 명을 해고했다.

이런 부당해고에 맞서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부산대 분회(이하 비정규 교수노조)를 주축으로 저항이 시작됐다. 8월 27일 비정규 교수노조가 주최한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부산대학교 본부 앞에서 열렸다. 긴급하게 조직된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 민주협의회 등 사회단체들과 총학생회, 민주

노동당 학생위, 대학생사람연대, 다함께 부산대 모임 등 다양한 학생 단체들에서 40여 명이 참가했다.

앞의 학생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부산대 대학생 행동연대(가)’는 강사 해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기도 하다며 해고 철회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리플렛 1천 부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총학생회는 최근의 학내 자치권 탄압 문제와 이 문제를 연결시켜 학생 집회를

주최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학교 본부 앞에 천막을 치고 9월 2일 민주노총 부산 본부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등이 참가해 총력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저항이 만만치 않게 확대되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자, 학교 본부의 태도도 달라졌다. 총력집회 당일 아침, 부산대 당국은 강의 시수를 일시적으로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게 하자는 비정규 교수노

조의 안을 받아들였다.

비정규 교수노조를 주축으로 한 투쟁과 연대의 확산이 부산대 당국의 정리해고 시도를 꺾고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와 정리해고 바람이 대학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쟁은 저항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정성희

나로호 발사 실패

제국주의 체제에서 우주 개발은 군사 무기 개발을 위한 것

김종환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무중력 상태로 우주에서 유명한 우주인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나도 한번 저래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다.

이미 몇 번이나 연기된 나로호 발사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본 전국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이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을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좀더 현실적인 많은 이들의 바람은 지구 상에는 없는 희귀하고 값비싼 이른바 ‘우주 자원’ 확보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런 꿈과 희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주 개발’의 실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주 개발’의 실체는 제국주의 위계질서 내에서 자국의 우세를 다른 나라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또 바로 4개월 뒤에 미국이 위성을 발사한 1957~58년은 미·소 제국주의간 열강

다툼이 한창일 때였다.

냉전 종식 이후 이른바 ‘우주 선진국’에 새로 합류한 나라는 이스라엘(1988년)과 이란(2009년)인데 이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주변국 또는 미국과 정치·군사적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들이다. 북한 역시 1998년 광명성 1호에 이어 지난 4월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자신이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과학용이나 군사용이기 이전에 정치용 위성”(《조선일보》)이라는 말은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위성 발사에 적용된다.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ICBM)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1998년과 2009년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국내 우익과 미국 언론의 알레르기 반응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비록 1단 로켓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했지만, 이번 나로호 발사를 통해 한국 지배자들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발사대와 나로 우주센터로 대표되는 미사일 통제 기술을 습득했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실제로 미국 비확산 정책 교육센터의 책임자조차도 “[나로호처럼]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로켓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실험을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하고 투덜거렸다.

일각에서는 나로호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면 지구온난화 연구 등 과학적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애초부터 나로호의 불안정한 타원 궤도 때문에 과학 연구에 필요한 질 높은 자료를 생산하기는 가능하지 않았다.

실제로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지난 수년간 준비중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은 프랑스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반면에 발사체가 아닌 과학기술위성 2호에 거는 학계의 기대는 아주 낮았다(이름을 아는 사람도 적다).

이처럼 지난 8월에 발사된 나로호는, 좁게 보면 무기 개발의 일환이고 넓게는 한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이를 미화하고 군사 대국을 향한 국내의 지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우주 주권”을 획득하고 “나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력으로 이루고 말겠다는 신념을 놓지 말”라고 논평한 것은 아쉽다.

대안

마지막으로 진정한 우주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국주의 하에서 각국의 모든 과학 기술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 수단일 뿐, 과학 기술 본래의 의미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모든 나라가 경쟁이 아니라 상호연대의 관점에서 기술을 공유한다면 각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사체 개발에 중복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연구에 필요한 더 많은 위성을 만들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우주를 탐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당히 현실적인데, 촬영 정보가 극비에 해당하는 첩보 위성과 달리 과학 위성이 생산하는 자료는 지금도 인터넷

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특화된 기술과 장점을 종합하고 기술적 난관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1백30여 나라에서 2천5백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서로의 자료를 종합해서 2007년에 만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4차 보고서는 불완전하지만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과학자들의 본분이자 그들의 최대 갈망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누군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찾기 위해 밤새 노력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기보다는 자유로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과학 기술 발전이 더 자연스러운 이유다.

이를 실현하려면, 과학자들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비효율적인 경쟁을 강요하며, 과학 기술을 전쟁 도구로 전락시키는 제국주의와 경쟁의 논리가 타파되어야 한다.

국제

오바마의 위기를 재촉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사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8월 한 달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망자 수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미군 사망자 수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이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맥크리스털은 이 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 전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또 한 번 ‘증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주 뒤 또 제출할 보고서에서 그는 구체적으로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4만 5천 명에 이르는 병력 증강을 요청할 예정이라 한다. 취임 초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2만 1천 명 증파를 결정한 오바마는 다시금 추가 증파 문제가 제기되자 거듭 고심하고 있다.

오바마 측근들은 개인별로 색조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증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특사 리처드 홀블룩과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시키려면 더 많은 군대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애초 증파에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지만 최근 맥크리스털의 보고서를 받아든 뒤로 증파 쪽에 무게를 둔 발언들을 하고 있다. 거의 유일하게 증파에 회의적인 인물은 부통령 조셉 바이든인데, 그는 증파의 효과를 의심한다. 기보다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서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파키스탄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지난 수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쏟은 우리의 노력이 정치·군사·경제 모두에서 불충분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

그러나 문제는 증파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임무 완수(Mission Accomplished)”?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모형 묘비들이 줄지어 있다.

군사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을 안정적으로 점령하는 데는 인구 50명 당 최소 병사 1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이것을 적용하면 50만 명이 넘는 병사가 필요한데, 이번에도 증파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 주

둔하는 총 병사 수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카르자이의 재선이 유력한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곳곳에서 선거 부정이 발견돼 이미 그 정치적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2001년 전쟁

뒤 두 번의 대선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가 안착했다고 말하려던 미국으로선 처지가 군색해졌다.

또 미군은 탈레반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나토군은 아프가니스탄 쿤드즈 지역을 폭격했는데 사망자 70명 중 절반 정도가 민간인이었다. 요컨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치적 안정을 얻기란 당분간 요원한 일이다.

더구나 미국 내 여론도 증파에 호의적이지 않다.

9월 1일 발표된 CBS 여론조사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41퍼센트로 4월의 33퍼센트보다 높아진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떨어졌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에 관한 오바마의 지지율도 4월의 56퍼센트에서 8퍼센트 떨어진 48퍼센트를 기록했다.

CNN-오피니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퍼센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한 반면 지지한 응답자는 42퍼센트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75퍼센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일부는 지난 번 증파의 효과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증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파 논쟁이 본격화하면 민주당 내 분열은 가속화할 것이다. 알겠게도 오바마는 의료 개혁 문제로 씨름하던 공화당을 발판 삼아 증파를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오바마에게 뼈아픈 것은 이번 증파 결정이 의료 개혁 후퇴와 마찬가지로 지지층의 분열을 재촉할 것이란 점이다.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오바마의 전쟁’이 된 상황에서, 이것은 더한층 심각한 정치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조명훈 기자 | jomh@left21.com

신장 지역

‘주사기 테러’의 진실

9월 3일 신장자치구 우루무치 시(市)에서 한족 거주민 2만 명 이상이 신장공산당 서기장 왕러취안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행진했다. 지방 정부 당국의 부패에 항의하는 중국의 여느 시위와는 달리, 이 시위의 동기는 진보적이지 아니라 반동적이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더한층 탄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한족들은 복수한다며 지나가는 위구르족들을 무차별 구타하기도 했다.

시위의 발단은 ‘위구르족 청년’이 한족을 ‘주사기로 무차별 공격’했다는 것이었다. 주사기 바늘에 병균이나 독이 묻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 아직 그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주사기에 찔리는 것은 분명 불쾌하고 고통스런 경험이다. 그러나 위구르족 청년들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본질인 60년에 걸친 중국 정부의 신장 점령과 위구르족 억압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억압과 차별의 역사

중국 소수민족에 관심을 가져 온 중국의 진보적 지식인 왕리송은 2007년에 신장 위구르족의 삶이 “점점 팔레스타인인들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위구르족이 겪어 온 차별과 억압을 보면 이것은 별로 과장이 아니다.

신장으로 한족 이주가 급격히 늘면서 위구르족은 신장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번두리로 밀려났고, 그들이 사는 곳은 빈민가가 됐다. 그들은 위구르족 거주지에서 벗어나면 시도 때도 없이 경찰의 검문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고, 교육·고용·공공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았다.

또, 이런 민족적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펼치면 ‘분리주의자’나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혀 죽을 수도 있었다. 예컨대, 1996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공식적으로 1백70명이 ‘테러리스트’ 혐의로 사형당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1997년 신장 자치구 이리 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을 때 진압 과정에서 위구르족이 거의 1천 명 살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가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위구르족을 게으르고 ‘개발’의 고마움도 모르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고 한족우월주의를 부추긴 결과 이 지역 한족의 히스테리는 한층 심해졌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더한층 탄압하고 편견을 부추겨서 이 위기를 넘기려 한다. 실제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중국 경찰은 주사기 공격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위구르족에 대한 통제도 더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위무단(慰撫團) 7천 명을 위구르족 주거지에 파견했는데, 이들의 주된 임무는 위구르족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고 협박하는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정부는 10월 1일 정부 수립 60주년 기념일에 ‘중화민족’의 단결을 과시하려 할 것이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김용욱 기자 | ohotange@left21.com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약진

독일 총선(9월 27일)을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8월 30일 실시된 독일 세 지방주(州)의회 선거 중 두 주에서 디링케(‘좌파’)가 크게 약진했다. 디링케는 튀링겐 주에서 27.4퍼센트(2위), 살란트 주에서 21.3퍼센트(2위)를 득표했다. 이것은 디링케가 올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지율에 못 미치는 득표(7.8퍼센트)를 한 것에 비춰 보면 매우 고무적인 변화다.

유럽의회 선거 뒤에 독일 보수 언론들은 독일 노동자들이 더는 반자본주의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당이 너무 좌경적 정책을 내놓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디링케 우파들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디링케가 분열하거나, 최소한 우경화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 직후 치른 전당대회에서는 오히려 당이 선명한 왼쪽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디링케 좌파의 주장이 승리했다. 그래서 주의회 선거 운동에서 디링케는 ‘하르츠Ⅳ[실업수당 지급 개악안]와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7세로 연장 같은 기존의 시장주의 정책 중단과 최저임금 대폭 상승,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즉각 철

수’ 등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좀더 좌파적인 대안을 주장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디링케 좌파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기존 정책을 고수한 독일 우파 정당 CDU(기독교민주연합)와 중도 좌파 SPD(사회민주당)의당은 모두 득표율이 크게 떨어졌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왼쪽의 대안을 제시한 디링케의 득표율이 크게 올랐다(공공주택 민영화를 지지하는 등 디링케 후보가 ‘사고’를 친 작센 주의 선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디링케의 성공과 도전

특히, SPD는 사를란트와 튀링겐에서 역사상 최저 득표를 기록했다. 선거 직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70퍼센트가 ‘노동자 정당’을 차지하는 SPD의 반노동자 정책에 불만을 표현했다.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디링케의 득표가 크게 늘어난 것은 SPD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대거 디링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살란트 주에서는 디링케가 SPD보다 더 많은 노동자 표를 얻었다(34퍼센트 대 27퍼센트). 이것은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에서 디링케가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동시에 디링케의 대성공은 도전을 제기한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살란트와 튀링겐 주에서는 SPD와 디링케의 ‘적(赤)–적(赤)’ 연정설이 흘러나왔다. 디링케의 공식 주장은 SPD가 반노동 정책을 버리고 디링케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는 고사하고, 주정부에서도 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쿠르트 벡이 이끄는 현 SPD 지도부는 SPD 역사상 가장 보수적 지도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디링케 우파들은 디링케가 연정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베를린 시 정부에서 SPD와 연정하려고 SPD의 시장주의 정책을 지지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쟁점에서 디링케 좌파의 견해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디링케 좌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오스카 라폰텐을 포함해서 상당수는 주정부 차원에서(심지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SPD와 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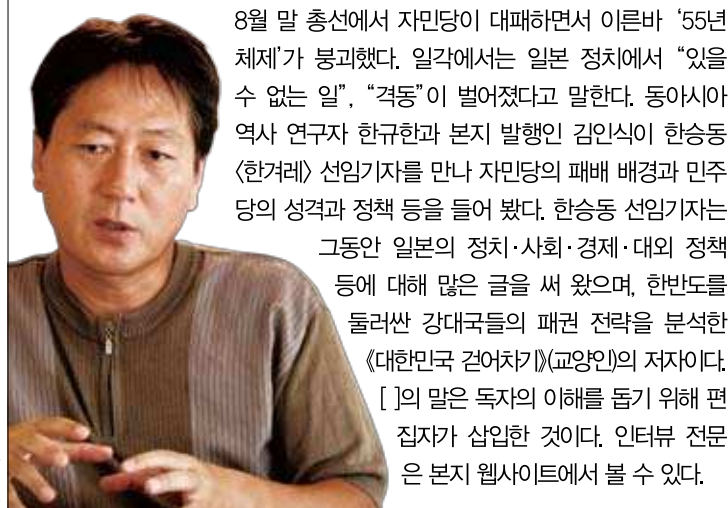
다. 선거 결과가 좋을수록 그들은 타협을 통해 SPD와 정부를 꾸리는 것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더 좋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뒤에 중간지(다스슈피겔)이 지적했듯이, 디링케가 연정의 일부로 참가한다면 연정 파트너들한테서 “주정부들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공무원 해고 반대, 복지비 삭감 반대, 사유화 반대라는 오스카 라폰텐의 기존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 국가 기구에 도전하는 처지에서 그 일부를 운영하는 처지가 되면 그런 압력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디링케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모임인 ‘마르크스21’의 지도자 크리스틴 뉘홀츠가 말하듯이 디링케의 당면 목적은 연정을 꾸리려고 주관일을 굴리는 것보다는 “하르츠Ⅳ, 연금 지급 연령 67세로의 연장, 공공교육 개악 정책, 대량 해고,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맞선 저항을 고무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의회 안팎에서 펼치는 것”이 돼야 한다.

김용욱 기자 | ohotange@left21.com

‘격차사회’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변화의 열망을 보여 준 일본의 역사적 총선 결과



한승동 기자

8월 말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패하면서 이른바 '55년 체제'가 붕괴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격동"이 벌어졌다고 말한다. 동아시아 역사 연구자 한규환과 본지 발행인 김민식이 한승동 <한겨레> 선임기자를 만나 자민당의 패배 배경과 민주당의 성격과 정책 등을 들어 봤다. 한승동 선임기자는 그동안 일본의 정치·사회·경제·대외 정책 등에 대해 많은 글을 써 왔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전략을 분석한 <대한민국 권역지리>[교양인]의 저자이다. [그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삽입한 것이다. 인터뷰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번에 자민당이 역사적 참패를 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중에게 아마 제일 피부에 와 닿은 것이 일본말로로는 '격차사회'라는 것, 우리말로로는 양극화 문제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감히 도입한 것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인데요, 일본 신문에 나온 유세 과정 반응들을 보면 민주당이 '야, 이거 우리가 확실히 이겼네' 하고 느낄 [정도였죠.] 가령 시골에 가 보면 아홉마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 자식들이 도교 같은 큰 도시에서 취업해서 일 잘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내려와서 하는 일도 없이 있다고 해요, 자민당 정책이 낡은 절망 속에 격차사회, 양극화에 따른 실업 문제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닿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도 비정규직이 30퍼센트가 넘죠. 우리와 비슷해요. 얼마 전에 아키히라에서 차 몰고 들어가서 칼을 휘두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출구 없는 막힌 사회에 대한 울분 같은 게 있죠. 특히 중하층 서민들 처지에서요.

자민당이 1993년에 한 번 넘어졌잖아요, 비자급 문제 등등 해서요.

그때 신당 사기까지 등과 연립한 호소카와 비자민 연립 정권이 들어섰죠. 그게 한 1년밖에 못 갔어요, 그 뒤에 결국 무라야마 사회당 당수를 총리로 세워 연립해서 자민당이 다시 대권을 잡고 1996년에 하시모토를 내세워서 자민당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자민당 체제는 '55년 체제'인데, '55년 체제'는 냉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던 거죠. 장기 일당 집권 체제였는데 냉전이 무너지면서 그 이데올로기가 자체가 무너지니까 자민당이 휘청했고 그 다음에 부케 스캔들까지 겹쳐서 일시적으로 몰락한 거죠. 그런데 그 뒤 하시모토 등이 나서서 다시 복귀했는데, 그 후에 한 15년 버텨 온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자민당은 이미 그 때 깨졌고, 그 다음에는 거의 버려 온 식으로 지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더는 멈질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자민당과 이념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강렬하게 자민당이 아닌 대체물 [이 필요하다고.] 자민당으로는 한계가 왔다고 느끼며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한 거죠.

대구에 이번에는 금융 공황도 큰 구실을 했죠. 사실 옛날에 DJ 정부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게 IMF 사태였듯이, 오바마도 이번에 금융 공황이 아니었으면 힘들었겠죠. 아무런 에드워드 케네디나 백인 일부 사회가 지지한다 한들 힘들었을 겁니다. 부시의 네오콘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주 결정적으로 파탄나니까 대중이 변화를 바랐고 그래서 오바마가 됐듯이, 이번에 일본 민주당 압승도 다분히 경제 공황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식 월스트리트 자본주의는 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피부에 와 닿았잖아요.

하토야마나 간 나오토나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 더는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

이었죠. 그리고 그걸 보면 결국 이번 금융 공황을 일으킨 서브프라임모기지과 실물 경제의 불황이 민주당 압승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민주당이 복지공약을 많이 내세웠고 대중에게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던 듯한데, 민주당이 이런 복지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이번에 농촌 보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도 주겠다고 그러고, 돈 몇만 엔씩 준다는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재정 부담을 늘린 텐데요,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1백80퍼센트라고 합니다. 1년 GDP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것은 OECD 국가들, 선진국들의 부채 비율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재정 동원할 여지가 그만큼 없는 거죠. 복지와 연결되는 비용을 어디서 엄출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감세정책이나 여러 가지 재정들을 잘 컨트롤해서 많이 남기겠다는데, 이렇바 정부가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것으로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일본 예산 중에 복지 관련 예산이 26퍼센트 정도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국제 이자 대는 게 2위예요. 그게 일본 국가예산의 24퍼센트가 되요, 국가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빚 갖는 데 쓰는 거예요, 세금 받아서 빚 갚는 데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새로운 재원을 조달해서 과감하게 복지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조세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은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소비세 같은 경우는 일본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인데, 하토야마 쪽은 소비세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거든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세금 늘리는 방법을 쓸 수 없을 겁니다.

대신에 민주당 하토야마 쪽이나 간 나오토 쪽이나, 주류 쪽 생각은 어쨌든 지금까지의 자민당, 특히 고이즈미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겠다는 거잖

아요. 그러니까 민영화 확대나 대기업 위주의 감세나 지원책에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겠다는 기본 정책은 있는 거 같습니다. 좀 더 국가 개입 쪽으로 기울다든가, 복지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장에 맡겨놓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하토야마의 '우애'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낱알 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하토야마는 감자들의 자유경쟁에 완전히 맡겨서 하는 미국식, 월스트리트식의 시장 만능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나 민영화 등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요. 민영화 [등에서] 자민당과의 차이를 보이는 길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한국의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지 기반이나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잡색당이에요. 온갖 사람이 다 있어요. 주요 멤버들하토야마, 오자와, 오카다 등은 자민당 출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회당 출신도 있고, 무소속 등 하여튼 잡색당이거든요.

근데 정강정책을 보면 자민당과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자민당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이뤘고 경제적으로 변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같은 편이라고 내세우는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쪽은 배제나 타도할 대상이죠. 예컨대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배제 대상으로 삼았고, 일본 자민당 우파들은 중국공산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합니다.

그런데 하토야마의 '우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면, 가치가 달라도 좋다, 체제가 달라도 좋다는 거죠. 공존공생, 그 사람의 아시아공동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토야마는 일단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나 아니냐 그걸 따질 필요는 없다. 다른 체제라도 공존공생할 수 있다. 서로 이야기 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민당이나 민주당이나 멤버 구성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냐.



8월 30일 민주당 선거운동

기반의 차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토야마 보면 알잖아요. 할아버지인 하토야마 이치로도 자민당 안에서 55년 체제를 만든 주역 중 하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당내에서는 막 반대[하는데] 소련과 국교정상화를 관철시킨 사람이예요. 어쨌든 하토야마는 귀족집안[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조부도 중의원 출신이고 다 정치 귀족들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물적 기반이 어찌 보면 하토야마 집안의 돈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 처가가 브릿지 스톤, 유명한 타이어 제발 딸과 결혼했죠. 하토야마는 돈 방석이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자본주의의 핵심 멤버 집안이었죠.

다음에 또 하나의 지주라 할 수 있는 오자와 이치로도 마찬가지로요. 오자와 이치로도 대대로 정치집안 출신입니다. 간 나오토는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간 나오토는 시민운동단체 출신이거든요. 관료나 정통 당로 출신은 아니고, 그래서 신진감이 있죠.

민주당은 어찌 보면 55년 체제에서 반대 세력으로서 다른 정당이 다 몰락하고 버리니까 몰락한 찌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안 정당으로 등장한 것일 뿐인 거죠.

새로운 이념이나 새로운 정당정책을 가지고 등장한 게 아니라 자민당이라고 하는 일당독재체제에 대응세력으로서 이합집산하다가 뭉친 거예요. 자민당의 장기집권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동요하니까, 정권교체 가능성이 생기니까 잡색들이 다 모였죠.

민주당은 외교정책 관점에서 '탈미입아'(脫美入亞)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탈미입아하면 좋긴 한데, 탈미입아는 아시겠지만 '탈미입구'(脫美入歐)를 변형한

말인데 이번에 하토야마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오바마와 전화통화에서도, '미일동맹이 기축이다'고요. 미일동맹이 기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민당 이래 죽 들어 온 말지는 않지만, 앞으로 세월이 걸리겠지만, 기본 과정은 미국의 일극체제는 끝났으니 현실적으로 중국을 실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미국과의 일방적인 관계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한 얘기는 바로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몇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어요. 오카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라든가 하는 거죠. 미국하고 자민당하고 쾅쾅쾅해서, 후텐마 기지 반대까 많으니까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같은 오카나와의 해도로 연안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토야마 같은 이들이 보기에 는 감고 아용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실제로 기지 이전 비용(60억 달러)을 왜 우리가 대느냐. 사실 거기서 돈만 줄여도 자기들이 말한 재정 부족분의 상당분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몇천억 엔씩 일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자민당과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볼 때 미국의 몰락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 일극체제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민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체가 근본적으로 동요하니까, 정권교체 가능성이 미국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외교도 미국 중심이고 안보 정책도 거의 미국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마 기지 같은 경우는 위싱턴주에 있던 [미국] 1군단이 아예 일본에 와서 지휘부를 만든다거나 하는, 거의 양국통합체제로 가는 거였던 말이지요.

그런데 하토야마나 민주당이 볼 때는 그런 이미 시효가 다 돼가는 낡은 정책이죠. 민주당이 지금 당장 그 정책(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행에 옮기거나 옮길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세월이 걸리겠지만, 기본 과정은 미국의 일극체제는 끝났으니 현실적으로 중국을 실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미국과의 일방적인 관계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한 얘기는 바로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몇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어요. 오카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라든가 하는 거죠. 미국하고 자민당하고 쾅쾅쾅해서, 후텐마 기지 반대까 많으니까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같은 오카나와의 해도로 연안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토야마 같은 이들이 보기에 는 감고 아용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실제로 기지 이전 비용(60억 달러)을 왜 우리가 대느냐. 사실 거기서 돈만 줄여도 자기들이 말한 재정 부족분의 상당분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몇천억 엔씩 일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자민당과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볼 때 미국의 몰락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 일극체제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민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체가 근본적으로 동요하니까, 정권교체 가능성이 미국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외교도 미국 중심이고 안보 정책도 거의 미국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마 기지 같은 경우는 위싱턴주에 있던 [미국] 1군단이 아예 일본에 와서 지휘부를 만든다거나 하는, 거의 양국통합체제로 가는 거였던 말이지요.

그런데 하토야마나 민주당이 볼 때는 그런 이미 시효가 다 돼가는 낡은 정책이죠. 민주당이 지금 당장 그 정책(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행에 옮기거나 옮길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세월이 걸리겠지만, 기본 과정은 미국의 일극체제는 끝났으니 현실적으로 중국을 실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미국과의 일방적인 관계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한 얘기는 바로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몇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어요. 오카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라든가 하는 거죠. 미국하고 자민당하고 쾅쾅쾅해서, 후텐마 기지 반대까 많으니까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같은 오카나와의 해도로 연안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토야마 같은 이들이 보기에 는 감고 아용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실제로 기지 이전 비용(60억 달러)을 왜 우리가 대느냐. 사실 거기서 돈만 줄여도 자기들이 말한 재정 부족분의 상당분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몇천억 엔씩 일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자민당과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볼 때 미국의 몰락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 일극체제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민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체가 근본적으로 동요하니까, 정권교체 가능성이 미국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외교도 미국 중심이고 안보 정책도 거의 미국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마 기지 같은 경우는 위싱턴주에 있던 [미국] 1군단이 아예 일본에 와서 지휘부를 만든다거나 하는, 거의 양국통합체제로 가는 거였던 말이지요.

그런데 하토야마나 민주당이 볼 때는 그런 이미 시효가 다 돼가는 낡은 정책이죠. 민주당이 지금 당장 그 정책(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행에 옮기거나 옮길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세월이 걸리겠지만, 기본 과정은 미국의 일극체제는 끝났으니 현실적으로 중국을 실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미국과의 일방적인 관계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한 얘기는 바로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몇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어요. 오카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라든가 하는 거죠. 미국하고 자민당하고 쾅쾅쾅해서, 후텐마 기지 반대까 많으니까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같은 오카나와의 해도로 연안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토야마 같은 이들이 보기에 는 감고 아용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실제로 기지 이전 비용(60억 달러)을 왜 우리가 대느냐. 사실 거기서 돈만 줄여도 자기들이 말한 재정 부족분의 상당분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몇천억 엔씩 일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자민당과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볼 때 미국의 몰락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 일극체제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민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체가 근본적으로 동요하니까, 정권교체 가능성이 미국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외교도 미국 중심이고 안보 정책도 거의 미국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마 기지 같은 경우는 위싱턴주에 있던 [미국] 1군단이 아예 일본에 와서 지휘부를 만든다거나 하는, 거의 양국통합체제로 가는 거였던 말이지요.

는, 상징 천황제라는 말은 안 쓰지만, 내용 상으로는 상징 천황제입니다. 옛날 히로히토 천황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제한했지만 그래도 일본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해 놔거든요. 세련된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천황제는 그대로 존속한 것입니다.

미국이 존속시켰죠. 이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천황 하나만 굴복시키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미국이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천황이 한 번도 자기들이 정정 잘못했다고 명시적으로 애기한 적이 없어요.

천황은 무오류의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걸 하면 일본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국제라는 것인데, 2차대전 때 일본이 항복 조건 중에 제1의 조건이 국제 호조예요. 그러니까 천황제 유지죠, 결국 관철됐죠. 미국도 그것을 알면서 살려 줬죠.

일본 사민당이나 공산당의 성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미하죠. 사민당은 — 옛날 사회당은 — 냉전 붕괴로 몰락했어요.

또 자민당과 연립하면서 사회당은 완전 몰락해 버렸죠. 나중에 이듬해가 유지하기 힘들니까 지금 사회민주당으로 있었잖아요. 대안 정당으로 기능했던 사회당이 자민당하고 연립해 버렸으니까. 천황제 문제나 미일동맹 문제나 야스쿠니 문제나 다 자민당과 차별성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사회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몰락했죠. 지금은 중의원 의석이 7석밖에 안 되요.

공산당은 지역 순수 조직으로서 보면 아주 강해요. 정성이 굉장히 강해요. 공산당이 절대로 집권할 수는 없지만 지역표가 굉장히 강할때 지역에서 공산당이 굉장히 성실해요. 못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데 앞장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예요. 종교 조직에 비금급 정도의 순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고 투표해요. 불행하게도 그 범위는 아주 제한돼 있죠. 지역조직으로서 건재한 거죠.

최근 공산당이 당세를 상당히 확장했다는 소신도 있겠네요.

<개공선> — 1920년대 처음 나온 소설 — 이 꽤 인기가 있었는데, <개공선>이 다시 나온 시점이 아까 말한 아키히라라 노동 사건과 시점이 일치해요. 일본 젊은이들에게 출구가 없으니까 옛날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갑자기 인기를 얻고, <자본론>은 여러 우니까 <자본론>을 해설하는 책들이 지금 막 팔리잖아요.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일본 공산당 세가 늘어나는 것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거죠. 이념적으로 뭔가 자각이 라고 할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전후 일본이 잘 나간, 한 반세기 동안 일그러진 것 안 하고 굽을 걱정 안 하고 생각없이 [지냈는데], 최근에 와서 기본적으로 내 개인이 문제거나 아니라 구조가 문제라는 그런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공산당이 갑자기 세가 확 팽창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와서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중하층 서민 사이에서는 분명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은 길게 이어질 거고 단기적 공동체 논리와 부합하죠.

결국은 일본의 피해의식인데, 제가 볼 때 일본 지배층이 절대로 현명하지도 않고 어딘스럽지도 않고 유치해요. [일본 지배층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은] 천황제 때문이에요. 천황은 일본의 정신구조에서 절대적 가치예요. 구심점이지, 헌법상으로는

누직 한규환

이번 호에 실릴 예정이었던 크리스 하만의 '21세기 노동자 계급'은 지면관계상 다음 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옛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30주년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러시아 제국의 무덤이 됐는가?

최근 러시아가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3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지만 9년 만에 패배를 인정하고 철군한 바 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데이브 크라우치는 그들이 저항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한다.

1990년대 초반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보통 다리가 없었다. 그들은 러시아의 재앙적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희생자였다.

소련군의 침략은 1979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시작됐고, 9년 뒤 소련군이 우크라이나로 퇴각하면서 끝났다.

최소한 소련군 1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인 50만 명을 학살했다. 더 많은 이가 불구자가 됐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소련군은 전폭기, 네이팜 폭탄, 탱크, 지뢰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아프가니스탄 게릴라, 즉 무자헤딘과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다.

소련의 패배는 소련군 무패 신화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윽고 대중적 민족주의 운동이 소련 제국을 해체했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 군대의 지휘관들은 옛 소련의 패배 기억에 시달리고 있다. 미 육군 소령 한 명은 2005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꿈을 뒤쫓아 숲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규모는 당시 소련군 규모와 비슷하다. 나토 앞에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방 국가 정상들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다르다고 말한다. 미국과 나토군은 탈레반에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소련 정부도 잔혹한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또, 오늘날 미국 정부처럼, 당시 소련 정부도 처음에는 제한적 목표로 소규모 병력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지만, 곧 통제할 수 없는 전쟁에 빠져들었다.

처음에 소련 정부는 18개월 전에 집권한 인기없는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부를 지원하려고 들어왔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부는 붕괴 일보직전이었고, 소련 남부 공화국들에서 이슬람주의 저항의 물결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컸다.

소련 특전사들은 자신의 앞잡이 바락 카말을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그들은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고, 통제를 유지하려고 아프가니스탄군을 육성했다.

소련 정부는 그 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소련은 193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과 무역을 터 놓고, 1950년대부터 소련의 군사·경제 자문단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돼 왔다. 소련 자문단이 아프가니스탄의 도로를 대부분 건설했다.

그러나 소련 침략에 맞선 저항이 즉각 시작됐다. 1980년 2월 23일 밤, 카불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소련군 진입에 항의해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신은 위대하



198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퇴각하는 소련군



소련군 점령 당시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들이 소련군 주둔지를 향해 포탄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

다’ 하고 외쳤다. 소련군은 저항에 나선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상대해야 했다.

소련군 장교들은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육군참모총장 니콜라이 오가르코프는 주둔군 규모를 11만 5천 명으로 제한한 것을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사가 다섯 곱질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거부당했다.

대신에 소련 정부는 막강한 화력을 동원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들은 저항세력을 꺾기 위해 공업 강국이 보유한 끔찍한 군사기술을 모두 동원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했다. 소련군은 도시를 벗어나면 도처에서 위험받았고, 기동력이 탁월한 게릴라 전사들이 벌이는 효과적 공격의 제물이 됐다.

“잔디 깎기”

소련 기갑부대는 공군의 지원을 받아 저항세력의 거점들을 파괴하려고 농촌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과 작물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아프가니스탄인이 저항을 지지하게 됐다.

예컨대, 1984년 공세 기간에 소련군은 헤라트 시(市)에서 서쪽으로 20킬로미터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교외 거주지와 촌락 들을 파괴했다.

무자헤딘의 거점을 파괴한 후 소련군은 철수했고, 무자헤딘은 곧 다시 돌아왔

다. 오늘날 미군과 나토군도 동일한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미군과 나토군은 이것을 “잔디 깎기”라고 부른다. 저항세력을 소탕하자마자 새로운 저항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심’을 얻겠다는 말은 위선일 뿐이다.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나토군 총사령관인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장병들에게 보내는 지침에서, 주둔군이 민간인을 살해한 결과로 [민간인] 친척들이 무기를 들게 된다면 “우리가 물락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과 나토군은 기지를 벗어나자마자 위협에 직면한다. 매달 도로를 통해 주둔군 필수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트럭 수백 대가 탈레반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처럼, 당시 소련 정부도 15만 명에 이르는 아프가니스탄군을 육성해 대신 싸우게 만들려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소련 정부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는데도, 장비와 훈련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러시아인들의 인종차별주의적 태도는 아프가니스탄군의 불만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그 결과, 당시 아프가니스탄군 안에 저항세력에 동조하는 군인이 꽤 많이 있었

고, 이들이 종종 무자헤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소련군은 징집된 군인들로 구성됐고, 복무 조건은 처참했다. 9년의 점령 동안 소련군 약 65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다. 그 중 거의 4분의 3이 부상하거나, 간염·이질·말라리아·발진티푸스 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소련군 병사들은 저항세력한테서 침낭이나 군화를 획득하면 기뻐했는데, 자기 것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귀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사악한 적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소련군 병사들은 자기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가난하지만 자존심 센 아프가니스탄 농민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소련군의 사기는 매우 낮았다. 약물과 알코올 중독이 만연했고, 성폭행과 폭력 범죄가 흔하게 발생했다.

소련군 장교들은 아프가니스탄 복무를 끔찍이 싫어했다. 그들은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연적 패배에 대한 비난을 자신들이 뒤집어 쓸 것을 알고 있었다.

1983년에 소련 언론은 6명의 사상자만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6천 명 이상이 죽고 1만 명 이상이 부상했다.

그러나 소련 육군이 대규모 징집 장병들로 구성된 마당에, 청년들이 무의미하고 잔인한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진실이 퍼지는 것을 언론 통제만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아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가족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소련의 패배를 분석한 미국의 모든 군사 저술가들은 러시아인들이 승리할 의지를 잃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이것을 “비대칭적 전쟁의 모순”으로 부른다.

모순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는 군사적 초강국이 가난한 적을 당연히 늘 이겨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비대칭적 전쟁의 모순

“비대칭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전쟁이 러시아인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인에게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아프

가니스탄인에게 이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이자 총력전이였다.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로 처지다. 따라서 전투 의지를 먼저 잃을 쪽은 아프가니스탄인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쪽이 될 것이다.

게릴라군은 기술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점령군과 전면전을 벌이려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매복과 사제 폭탄으로 점령군의 사기를 조금씩 꺾는다.

1980년대 소련 정부에게는 다른 문제도 있었다. 당시 소련 경제는 붕괴하고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국제적 공분이 있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체제에 대한 환멸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머물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커진 것이다.

어떤 이는 소련군의 패배에서 미국의 무자헤딘 지원이 매우 중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1986년 최첨단 스텔러 대공 미사일을 제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사일을 얻기 전에도 저항세력은 헬리콥터와 탱크 수백 대를 파괴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지도자로 취임하자마자 소련 장군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물었다. 대답은 ‘아니다’였다. 소련의 패배 원인은 기술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였다.

아프가니스탄인은 침략군이 들어올 때마다 용맹하게 맞서 싸웠다. 그들은 19세기 영국이 가장 막강한 군사강국일 때 영국군을 물리쳤다.

그들은 1980년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막강한 군사강국인 소련을 무찔렀다. 2001년 9·11 이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시작할 때 한 CIA 간부는 이렇게 경고했다. “미국은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프가니스탄 역사가 낳은 쓰레기 더미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기자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시행이 지연되던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2일에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교원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한 후 내년부터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은 모든 교사가 수업을 매 학기 2회 이상씩 교장·학부모·동료 교사 등에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고, 결과가 우수한 교사는 안식년을 주거나 연구강사·입학사정관으로 활용하고 미흡한 교사는 6개월간 연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학교별로 지급해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해 ‘공교육의 질을 높ی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안을 발표하자 보수 언론들은 교원평가제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한편, 평가 결과를 단순히 상벌이나 성과급과 연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인사에 반영해



성업 중인 대치동 학원가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학생들의 입시경쟁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더욱 강화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조만간 근무평정제와 교원평가제를 통합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의 교원평가제 요구는 ‘공교육 정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들은 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과중한 잡무를 줄이라는 진보진영의 요구를 수십 년간 무시해 왔다.

게다가 일제고사 실시, 학교 선택제, 자립형사립학교 도입 등으로 평준화를 완전히 해체해, 학생들을 더욱더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고 교육에서 부익부 빈의

빈 현상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 방안이 도입된다면 일제고사 성적이나 학교 선택의 결과가 교원평가에 반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교사·학교 사이에서 학생들의 점수 높이기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교사들도 구조조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학교평가가 결합된 미국·영국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종용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일제고사를 본 한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교사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물론 학생이 교사들의 수업 방식과 학생 지도 방식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 등에 반영하는 것은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에는 이런 민주적 내용이 전혀

없다. 학생·학부모는 교사를 직접 평가할 수 없고 대신 만족도 조사를 해 그 의견을 교장이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해야 한다.

전교조는 얼마 전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맞서 대안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의 공세에 맞서 좀더 일찍부터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

지금이라도 진보적인 교사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사를 평가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진보적인 교사 평가 방안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참교육 정신’을 실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강동훈 기자 | kdh@left21.com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 9월 21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기사에 대한 의견,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보적 애국주의’ 비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

1. 한규한 동지는 <레프트21> 13호 ‘좌파가 진보적 애국주의를 수용해야 하는가’ 기사에서 “헌법 애국주의가 대중적 논쟁 차원에서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장은주 씨의 주장이 주관적 희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애국주의가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진정 장은주 교수의 주장인가? 한규한 동지 자신이 인용한 구절에서 장은주 교수는 ‘진보정치’는 오히려 올바른 애국주의로 무장하고서 우파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우파가 애국주의의 담론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좌파가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 좌파가 애국주의를 독점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장은주 교수의 주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가?

2. 한규한 동지는 나아가 하버마스가 “인권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을 환영한 사실을 근거로 하버마스의 헌법적 보편 가치 옹호가 “실천의 시험대에서 심하게 비틀거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비틀거림은 현상적으로는 ‘인권’이라는 지침을 심각하게 잘못 적용한 데 따른 결과이고, 보

다 근원적으로는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하버마스의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마치 그것이 헌법 애국주의 자체의 한계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한국 반전 운동이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5조를 근거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 것이나, 일본 평화 활동가들이 ‘평화헌법’ 9조를 근거로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현실에서는 많은 저항 운동들이 사실상 헌법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함께 봐야하지 않을까?

3.한규한 동지는 민주공화주의에는 근본적 결함이 있다면서 그 근거로 착취적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이상으로서의 ‘민주공화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 존재하는 현실의 ‘공화국’이 같은 것은 아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화국 구성원들’을 전제로 하는 민주공화주의의 이상 자체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충돌하지 않는다. 문제는 (한규한 씨도 지적하듯이) 현실의 공화국이 기반하고 있는 착취 체제가 ‘공화국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진정한 결함은 민주공화

주의라는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한규한 동지도 이 점을 나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의 서술 방식은 공화주의의 이념 자체를 지나치게 문제 삼는 듯한 인상을 준다. 마르크스처럼 처음에는 급진적 공화주의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회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고려해 서술하지 않아 아쉽다.

4. 한규한 동지는 애국주의가 필연적으로 우익들을 이롭게 해 준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몇 군데서 한다. “좌파의 애국주의 담론은 ...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동계급이 희생해야 한다는 우파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촛불]시위의 주된 구호가 애국과 국익으로 설정됐다면 우파가 시위대의 논리를 공격할 기회를 더 자주 얻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현실은 좀더 복잡하다. 가령 촛불시위대가 ‘광우병 쇠고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주장했다고 치자. 이런 논리가 우파의 애국주의를 조금이라도 강화시켜 주는가? 전혀 그렇지 않

다! 우파가 생각하는 애국과 촛불시위자가 생각할 법한 애국은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피착취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국익’이라고 했을 때 한 국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착취 계급에 속하는 자들의 경우 아무리 주관적으로는 국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국가 구성원 대다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극소수의 이익에 봉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파적 애국주의의 본질적 모순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각자 애국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충돌할 때는 경우에 따라 이 같은 본질적 모순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니들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아가면서까지 추구하겠다는 국익이 대체 누구의 국익이야?”). 이런 순간은 아무래도 진보진영보다는 우파에게 더 곤혹스러운 순간일 것 같다. 이런 순간에는 애국주의 일반을 싸잡아서 ‘버려야 할 낡은 관념’이라고 딱지 붙이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애국’의 언어를 차용해서라도 우파적 애국주의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천경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소중한 성과’ 인가

나는 강영만 씨가 <레프트21> 13호 독자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그간 운동진영이 노력한 성과”라고 방점을 찍은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정부는 ‘친서민 중도’ 정책을 운운하며 대중의 불만을 달래면서, 동시에 자신의 우편향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 학자금 대출제 개혁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다. 마치 폐강도들이 우리 지갑에서 1백만 원을 빼앗을 때 버스

는 타라고 천원 한 장 내미는 격이랄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감세 규모는 2012년까지 총 90조 원에 달한다.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남을 액수다. 막대한 재정적자(올해만 51조 원)와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꾸려고 이명박은 서민의 지갑을 털고 각종 사회보장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다. 소위 ‘신손세’를 올리고, 이미 쥐꼬리만한 기초생활보장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보라. 하루치 일간지들만 대중 훑어봐도 최근 정부의 반서

민 정책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좌파가 극심한 박탈감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대중에게 학자금 대출제도의 미미한 개선을 ‘성과’라고 설명하는 게 옳을까.

게다가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나 있을지도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았다. 등록금이 매년 지금처럼 오른다면, 이에 따라 대출 이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파 정부가 끝까지 유지하려고 할까? 이번엔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을 없앴듯, 이마저도 후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나는 강영만 씨의 평가보다는 <레프트21> 11호에서 선영 씨가 설명한 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조삼모사식 기만 정책’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익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감옥에서 온 독자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을 하고 들어오니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여러 가지 소식이오니 참으로 마음이 탁 트입니다.

저는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용산특위 위원장 김학현입니다. 이곳에서 동지들의 느낌을 받으니 참으로 잠시 답답했던 마음은 녹듯이 흘러 내리며 이렇게 든든한 동지들이 내 옆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마음 깊이 투쟁의 다짐을 이곳에서도 되새겨 봅니다.

저는 편하게 이곳에 있지만 지금이 시간에 또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며 고생할 동지들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나가서 동지들과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텐데, 이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어 죄송합니다.

동지 여러분, 저의 촛불은 언제나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 정부가 억압과 탄압을 계속한다면 저희는 더욱더 연대하여 이 투쟁을 승리의 투쟁으로 이루어 봅시다.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밖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 몸 다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잘들 계세요.

지금의 모습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할 사랑하는 동지가 서울구치소에서 2009년 9월 1일

바로잡습니다
본지 13호 8페이지 하단에 실린 사진은 1차세계대전 당시 사진이 아니라, 2차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사용한 셔먼 탱크 사진입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독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쌍용차

쌍용차 사측과 정부가 77일간의 잠거 파업에 대한 비열한 보복과 노조 파괴 공작에 나선 지금, 고용보장을 요구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를 위한 연대가 왜 중요했는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레프트21> 편집부는 쌍용차에서 여전히 공기업을화를 통한 고용 보장 요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중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의 글과 쌍용차 투쟁을 상반기 정지 투쟁의 연장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의 글 등을 싣는다. 최일봉 운영위원의 글은 지난 8월 15일 ‘상반기 투쟁 평가’ 다함께 회원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발표 시점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교훈과 과제를 제시해 우리가 인상주의적 평가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전히 쌍용차 공기업을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가 중요하다

지금 법정부관리인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을 철저히 쥐어짜고 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 법원의 희생 결정을 받아내고 시장가치를 높여서 재매각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재매각되면 상하이차에 팔린 후 나타났던 비극과 재앙들이 고스란히 반복 될 것이 뻔하다. 세계적 경제 위기와 자동차 시장의 과잉생산 속에 쌍용차는 살 길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고 다시 구조조정을 강요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죽은 자’가 생길 것이고, ‘산 자’도 끔찍한 노동강도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가 곧 ‘죽은 자’로 전락할 것이다. 이것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쌍용차를 공기업을화해서 정부가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여전히 중요하다. 노동자 고통전가의 악순환을 멈추려면 쌍용차를 공기업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등을 생산하는 데 쌍용차의 설비와 인력을 이용해야 한다.

쌍용차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 속출할 부도 기업의 노동자들은 이처럼 공기업을화라는 행동강령을 제기하며 투쟁하고 연대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투쟁이 확대될 수 있는 초점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저들은 경제 위기에 따른 기업 부실

과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 이에 반해 공기업을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는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최우선에 둔다는 점에서 기업주들과 정부 간에 차이가 없지만 대중은 정부에 최소한의 공적기능과 책임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공기업을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는 이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런 투쟁이 확대되면 정부의 본질이 밝히 드러나고, 노동자들의 정치의식도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쌍용차 파업중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일시적 공기업을화’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국유화는 이번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국가들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GM에 대해 14조 공장 폐쇄와 2만여 명의 정리해고를 전제로 하고, 반년이나 1년 반쯤 후에 다시 매각하겠다는 오바마식 국유화는 기업주와 투자자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도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의 피해가 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실기업의 재정을 국가가 메우고, 이어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식인 것이다.

한편, 투쟁에 필요한 정치적 대안 제시를 회피하고 해고 반대 투쟁만이 능사라는 식

으로 접근하는 일부 급진좌파의 관점도 문제다. 그러나 쌍용차 파업에서도 노동자들을 가장 괴롭힌 문제는 대안 부재였고, 이때문에 거둬 노동자 양보론이 제기됐다.

이에 압력을 받은 일부 급진좌파들은 사회주의적 의미의 국유화를 대안으로 제기했다. 부도 기업 공기업을화 요구가 반드시 노동자 산업 통제나 노동자 정부 수립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동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행동강령은 아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자신감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향할 만큼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당면한 투쟁에 적합한 요구인 동시에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투쟁이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공기업을화 요구는 당장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적 국유화와 같을 수가 없다. 행동강령의 의의는 현실 투쟁이 근본적 사회변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고를 하는 데 있지, 그것의 최종적 형태나 원칙을 되뇌는 데 있지 않다. 현실의 구체적인 투쟁에 사회주의적 원칙 수준의 강령을 제시하면서 막상 개혁주의자들이 제기하는 공적자금 투입 요구에 안주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중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살인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공기업을화가 필요하다.

사진 임수현

합의를 무시하고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강제 탈퇴시킨 쌍용차 사측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측은 노사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된 58명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파업 농성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아직도 악몽과 정신질환 등 사측과 경찰의 살인 진압과 강압적 수사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월 8일에는 파업에 반대한 친사측 조합원들이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소집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75.3퍼센트와 찬성을 73.1퍼센트로 민주노총을 탈퇴를 결정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을 해고했다”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믿을 수 없고 투표 자체가 무효다. 총

회를 추진한 조합원은 총회 소집권자인 노동조합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 요청도 하지 않았다.

투표는 올해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4명을 무시하고 진행됐다. 공장 출입이 가로막혀 있는 파업 참가 조합원 1천여 명과 해고자들에게는 사실상 투표권도 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투표는 강압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 조합원은 “투표소 옆에 관리자와 용역들이 서서 지켜고 있었다”고 말한다.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이미 지난달 18일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민주노총 탈퇴뿐 아니라 노사 규약도 실질적 내용으로 바뀌려겠다”고 밝혔다.

현재 평택공장은 관리자들의 감시와

강화된 노동강도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평택공장의 시간당 생산차량은 17대에서 22대로 늘었고, 쉬틈도 없이 로봇처럼 일해서 무릎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부쩍 늘었다.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더는 일 못하겠다”며 20명 정도가 사표를 썼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정리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단적인 복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급속노조는 강력 지원하고 연대해 77일간의 파업이 그나마 낳은 작은 성과마저 무효화로 만들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저들의 시도를 저지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힘을 줘야 한다.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상반기 정치투쟁의

이 글은 다른 다함께 운영위원 전지윤이 단체를 대표해 집필한 글,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 영웅적 파업이 보여 준 것 — 아쉽지만 선방한 투쟁의 교훈과 이후 과제”(〈레프트21〉12호)에 개인으로서 내가 보완하는 성격의 글이다. 내 글은 전지윤의 글과 약간 다르게 문제점을 노동조합 내부보다는 더 폭넓은 정치적 개혁주의에서 더 많이 보고, 이후 대안에서도 효과적인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투쟁의 승패 여부 자체에 대한 단체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모습에서 보듯이,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서 조직 노동계급의 저항 수위가 **모호한** 한 시기에 내 접근법과 전지윤 접근법의 차이는 **창조적 긴장**을 제기해, 토론을 심화시키는 데 이바지하리라고 본다.

1. 쌍용차 투쟁은 ‘정치적인’ 경제투쟁에서 시작해 정치투쟁으로 전개됐다

처음에 쌍용차 투쟁은 쌍용차라는 특정 기업에서 불거진 정리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관계상의 충돌이 발단이었지만, 이미 그때 쌍용차 경영권은 법정관리로 넘어가 있었고, 주 채권자도 국영은행인 산업은행이었다. 사용자가 국가였던 것이다. 이어 노동자들의 요구도 “공적자금 투입” 요구 등 신속히 국가에 관련된 것과 결합됐다.

그리고 조중훈 등 대자본가들의 신문이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비난하며 정부를 편들었고, 전경련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문제 삼는 등 기업주 단체들이 쌍용차 투쟁을 구조조정의 시금석으로 삼고 있었고, 공장 안팎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노사 양측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노총과 좌파 단체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좌파적 청년·학생들을 동원했다.

마르크스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차이를 요구 자체가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차이로 보았다. “노동계급이 지배계급에 대해 **하나의 계급**으로서 행동하며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지배계급을 굴복시키려 하는 운동은 모두 정치 운동이다.”(강조는 마르크스 자신의 것) 정치 운동은 **전(全) 계급적** 운동인 것이다. 이와 달리, 경제적 운동은 **부분적** 운동이다. 마르크스의 구분은 노동계급의 의식·조직과 관계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다음 말도 이에 비춰 읽어야 한다. “특정 공장이나 심지어 특정 업종에서 파업 등을 통해 개별 자본가에게 노동시간 단축

을 강요하려는 노력은 순전히 경제적 인 운동이다. 반면에, 법률 등을 통해 8시간 노동을 강요하려는 운동은 정치적인 운동이다.”

그러므로 나는 쌍용차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부터는 그것을 온전한 정치투쟁으로 보는 것이 우리 나라 진보 운동, 특히 선명 좌파 운동에 제대로 된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고 생각한다.

2. 쌍용차 투쟁은 앞선 정치투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일어났다

노무현 자살로 표면화된 반이명박 정서는 운동으로 발전해 5월 29일 서울광장 3만 명 촛불집회부터 6·10범국민대회까지 계속 성장했다. 서울광장에 5만~6만 명이 집결한 6·10범국민대회로 이명박 반대 운동은 정점에 올랐다. 이 운동은 역대 최대 규모 대학교수 시국선언도 동반하는 등 실로 광범한 저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명박은 노무현 서거 정국에서 활성화된 반정부 운동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의도했던 계획보다 한 달이나 늦게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쌍용차 노조 공격에 착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반정부 운동은 6·10 정점을 지나며 비틀거리게 된다. 반정부 운동의 핵심 조직자들과 활동가들의 정치가 포퓰리즘의 구체적 형태로서 인민전선주의였기 때문이다. 6·10 이후 민주당은 아래로부터의 격양된 대중 정서에 부담을 느껴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NGOs와 진보연대는 민주당과의 인민전선을 본격화한다. “6자 연석회의”(야4당 + 민생민주국민회의 + 시민단체연대회의)가 바로 민주대연합의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중엽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공산당이 급진당이라는 (당명과 달리 전혀 급진적이지 않고 오히려) 노골적인 자본주의 수호 정당과 협정을 맺어, 서로 비판하지 않기로 하고, 급진당의 강령 수준을 넘지 않기로 했을 때, 트로츠키는 공산당은 우익 반동이 일어나도 자승자박 끌이 될 것이고, 공산당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노동계급도 우익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한국에는 1930년대 공산당처럼 노동계급 기층 대중 속에 광범하고 단단하게 뿌리내린 조직이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에게 큰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포퓰리즘적 정치세력들이 있다. NGOs·NL 경향들은 민주당이 노무현 49재 직후 국회에 복귀하고, 한나라당 측 방송법안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을 한나라당이 협상으로 대부분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날치기로 뒤통수를 맞는 등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친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과의 동맹에 스스로 매였다.

주요 진보세력의 이런 인민전선주의는 이미 용산참사 항의운동이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검식기를 사퇴시키며 정점에 도달했을 때도 힐끗 드러났었다. 그 직후 민주당은 2·28과 3·1 집회가 따로 열리는 것을 선호할 만큼 소심했다. 이때 민주당을 NGOs가 추수하고 NGOs를 진보연대가 추수(追隨)하는 형국이 전개됐다. 결국 2·28 집회를 민주노총·언론노조·용산범대위

7월 말~8월 초의 당면 정세적 요인으로는, 용산참사 항의투쟁 때부터 쌍용차 투쟁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주도한 주요 진보세력의 인민전선적 정치가 자기 패배적 노선이였다는 점이다.

연장이자 대미 장식으로서 쌍용차 투쟁



서울시청 광장에 6만여 명이 결집한 6·10 대회는 상반기 투쟁의 정점이었다.

사진 임수현

가 각각 따로 치르며 용산참사 항의운동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그 직후 분출한 언론노조의 미디어법 반대 파업도 민주당의 배신과 함께 개운치 않게 중단됐다. 그럼에도 노동자 운동은 5월 화물연대 투쟁으로 다시금 기세를 높이며 전진했다. 그러던 중 돌연 노무현 서거 정국으로 정세가 급변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 주도 하에서 진보진영 내 포퓰리스트들이 민주당을 추수하면서 미디어법 저지 투쟁이 한풀 꺾이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언론 노동자 투쟁이 주춤한 사이에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총공세를 퍼부었다. 7월 말과 8월 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중무장한 4천 명의 경찰특수기동대가 수백 명의 점거자들을 중세 성곽 포위공격처럼 점차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고작 몇천 명의 피케팅은 중과부적이었다. 진정한 특별 노동자대회를 평택에서 열여 적어도 1만 5천 명 이상의 파켓들이 쌍용차 공장을 향해 방사형(放射形)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경찰을 혼비백산케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연대파업,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반드시 포함된 급속노조 연대파업이 꼭 필요했다. 이 주장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잘 모르는 이상론적 급진좌파의 백일몽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처럼 잘 조직된 노조라면 하루 파업(물론 총력 파업)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다. 그 이상의 동력은 실제로 없었을 텐데, 여기에는 좀더 장기적인 요인과 7월 말 당시의 정세적 요인이 결합됐을 것이다.

장기적인 요인은 “양치기 소년” 효과다. 즉, 일찍이 1백 년 전에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적했듯이 노조 관료주의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

고 타성에 빠뜨린다. 이제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십여 년 전과 달리 자기를 자신의 투쟁 잠재력에 대한 자신이 없다.

7월 말~8월 초의 당면 정세적 요인으로는, 용산참사 항의투쟁 때부터 쌍용차 투쟁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주도한 주요 진보세력의 인민전선적 정치가 **자기 패배적** 노선이었다는 점, 즉 운동을 전진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운동의 김을 빼고 그 싹을 죽여 놓았다는 점이다. 그것도 언제나 결정적 시점에서 말이다.

사실, 나는 더 일반적으로 말해, 한국에서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연대파업이 가능하려면 정치투쟁의 총격이 산업현장 바깥에서 가해지고 이것이 산업현장 투쟁과 맞물리는 경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1987년 6월항쟁이 7~9월 대중파업을 촉발했듯이 말이다. 또한, 사실 1996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중순까지 벌어진 “노동법 파업”도 12월 26일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의 노동법·안기부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한 정치적 항의로서 시작됐었다.

3. 투쟁에 참가한 주요 진보세력의 정치

쌍용차 연좌파업 참가자들은 실로 영웅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했다.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압박, 무엇보다 큰 압박은 막판에 청산 위협을 받을 때였을 것이다. “회사가 청산되면 책임질 거냐” 하는 동료 조합원들, 친구, 형제 등의 따가운 눈초리 말이다. 이를 대변하는 개혁주의자들의 목소리도 물론 넘쳐났다. “노조는 정리해고 결사반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가 안 팔리는 데 정리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다 죽는 길임을 인정해야 한다”(김기원 방송통신

대 경제학과 교수). “정리해고를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통을 나누고, 무급휴직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바로 이런 우파적 반발에 잘 저항하고 노동자 운동 전체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투사들은 쌍용차 위기의 진정한 대안을 중심으로 결속해야 했다. 그것은 바로 공기업화(국유화) 요구였다. 공기업화는 공적자금 투여와 다르다. 6월 4일 “위기의 자동차 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의 소유구조에서 공적자금 투입은 상하이차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효과를 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상하이차에 경영 책임을 물어 대주주 지분을 무상 소각하고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그 토론회에서는 또한 쌍용차와 GM대우를 결합시키고 감자와 무상 소각 등을 통해 정부가 대주주가 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민주노동당의 공기업화 주장은 실제 운동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내보기로 첫째, 민주노동당이 그 주장을 현실 대중운동으로 구현하지 못한, 일종의 선전주의적 한계가 있었다. 의회에서의 개혁입법에 주안점이 두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노동당 정치인들 자신이 이 견해로 입장이 통일돼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일부는 그런 입장을 원칙 있게 고수하지 않았던 듯하다. “쌍용자동차 교섭 타결에 대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기자회견문”이나 “쌍용자동차 노사간 교섭 타결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이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그 정당한 투쟁은 우리 모두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대변인 논평)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변혁운동가들은

개혁주의자 주도의 이 전선들에 개입해, 결국에는 대중에게서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막판 노사협상에서 노조 측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노조 측에 수용을 강력히 권고한 안(案)에 공기업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던 듯하다. 셋째, 민주노동당의 가장 주된 기반인 민주노총(각 연맹을 포함) 고위 상근간부층 다수가 공기업화를 ‘비현실적’으로 여기고 있던 것도 당의 정견이 의회정치용 모책에 국한되게 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의회 투쟁을 담당하는 데 비해 진보연대는 대중 투쟁 동원을 담당하는 일종의 역할분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실로 이번 쌍용차 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피케팅의 일등공신은 진보연대와 그 자매단체인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실로 헌신적으로, 또 전투적으로 쌍용차 공장 밖에서 피케팅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은 전제로서 한국의 진보운동이 추구하고 있던 인민전선주의, 다시 말해 민주당의 강령 수준을 넘지 않고, 민주당을 공개 비판하지 않아, 민주당과 최소공배수적 동맹을 유지하는 “민주대연합” 노선이 개혁주의의 문제점들을 놓고 있음을 모르는 듯했다.

내가 속한 다함께도 비록 혁명적 좌파 경향임에도 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교착 상태인 쌍용차 투쟁의 돌파구를 산업현장 —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총 현장조합원 투쟁 — 에서만 찾느라, 앞서 전개돼 온 반이명박 투쟁의 지지자들을 쌍용차 파업 지지로 동원하는 일에 소홀했던 듯하다. 가령 우리는 7월 25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울역 광장 집회 연설 기회를 얻었을 때 쌍용차 공장 피케팅 호소를 하지 않았다.(비록 다함께의 대학생 단체인 대학생다함께는 연대체인 대학생행동연대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대련 활동가들과 논쟁했지만 말이다.)

4. 맺음말 — 이후 전망

심각한 경제 위기가 노동계급 대중을 자동으로 급진화시키지는 않는다. 단적인 반증 사례를 들어도 이 점은 명확하다. 1973년 말 세계경제를 강타한 위기는 서구에서 열띤 계급투쟁을 낳았다. 포르투갈 혁명은 그 정점이었다. 반면 1979년의 경제 위기는 대저 등 신보수·신자유주의 정권의 선출로 이어졌다(비록 이란과 니카라과 등지에서는 제국주의 축출 혁명으로 이어졌지만 말이다). 1976년경부터 서구 노동계급이 1968년의 희망을 잃고 사기가 저하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도 독일 등지와 프랑스·스페인 등지에서 서로 다른 효과를 냈다. 나라마다 계급투쟁의 패턴이 처음부터 조금은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초기의 미세한 차이가 후기의 현격한 차이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이 계급투쟁의 복잡한 동역학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공황은 노동계급 속에 급진화를 일으켜 그 덕분에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하는 행운을 누렸다. 직전의 “노동법 파업” 덕분이었다. 2008년 가을의 공황도 직전의 촛불항쟁 덕분에 노동계급의 마음 속에 급진화를 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급진화의 정치는 급진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성격의 것이다. 가령 2005년 10월에 한나라당에 투표한 울산북구 노동자들은 2009년 4월에는 진보후보 조승수에게 투표함으로써 계급의식이 반전(反轉)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의식으로의 반전은 아니다. 직전의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 남아공과 브라질 등 신흥공업국 노동계급의 의식은 초기의 노동자주의 더하기 포퓰리즘의 혼성 형태에서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곧장 도약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사회 구조의 역사적 성격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진정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 대중 정당의 부재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도 사회 구조의 역사적 성격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더 자세한 논의는 이 소논술의 범위를 넘는 심도 있는 사회이론적 논의일 것이다.

용산참사 항의에서 쌍용차 연좌파업에 이르는 상반기 정치투쟁에서 개혁주의가 지도 이념으로서 유력했던 것은 한국 노동계급 의식의 모순되고 불균등한 발전을 반영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개혁주의 지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소심함과 보수성을 변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아님도 알아야 한다. 나는 다만,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변혁운동가들이 노동계급의 현실 계급의식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쌍용차 투쟁을 정치투쟁의 더 큰 맥락에서 떼어내 패배주의에 젖는 것은 변증법의 제1원리인 전체성(총체성) 원리를 망각하는 일일 것이다.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이명박 정권은 개헌 논의 따위로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반민주 악법 국회 통과나 산업에서의 대량해고 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민주주의와 계급투쟁이 현 시기 최대의 화두다. 하지만 때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도 노동계급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는 근본적 사회변혁 운동가들이 회피한다 해서 진정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전선과 마찬가지로 이 전선도 포퓰리스트 개혁주의자들에게 맡겨두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전장이다.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변혁운동가들은 개혁주의자 주도의 이 전선들에 개입해, 결국에는 대중에게서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리더십은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낱알이 쟁취해 결국 대중에게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인내심이 요구되는 지난하고 질질 끄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 최대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개혁주의의 영향력에 부대끼며 사는 것을 꺼려 거기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혁주의 지도자나 그런 단체 간부들한테서 도망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평소에는 거의 “자연스런” 대중 자신한테서도 도망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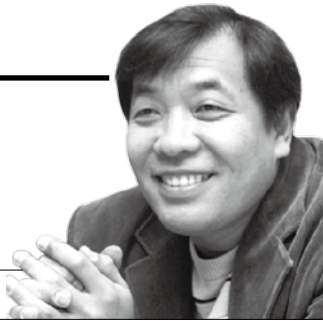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칼럼/논설

이강택 칼럼

최시중의 발언들이 의미하는 것

이강택 KBS PD /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누가 유가를 움직이는가 — 오일쇼크의 배후’ 등 연출



오만 진상을 빚으며 미디어법이 날치기된 지 벌써 두 달째. 많은 시민·학생 들이 폭염을 피해 흩어진 사이 미디어계 곳곳에서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짝짓기가 한창이다.

여기저기 들이대는 자 조종동이요, 이미 방송면 허를 손에 쥔 듯 행세하는 그들의 일차적 교미 대상은 국내자본이다. 거대 통신자본과 대기업, 심지어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원만كم 돈이 돈다는 곳에선 여김없이 조종동의 유혹과 협박 풍문이 흘러나오고 있다(물론 외국계 미디어자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저자세로 구애한다지만 …).

그러나 조종동의 종합편성채널 만들기는 결코 그들만의 외로운 작업이 아니다. 방송위원장이라는 든든한 매파가 “날기만 하면 양육은 우리가 책임진다” 하고 온갖 특혜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케이블TV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내보내도록 해 줄 것이며(의무 재송신), 현재 흡소핑 채널들이 사용하고 있는 KBS·MBC·SBS 사이의 8번과 10번을 배정해 줄 것이고(황금채널 배정), 각종 세제혜택(방송장비 도입 시 면세, 수익금 중 방송발전기금 징수 면제 등)도 제공하고, 내용 심의와 편성규제(교양 프로그램 편성비율, 국내산 콘텐츠 편성비율)도 더 풀어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 방송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뻔히 알기에, 이번 경제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수익 전망이 서지 않아 주저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어서 들어와 몸을 섞으라는 재촉이다.

1990년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SBS의 탄생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만,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공익에 위배되지 않게 하겠다, 저렇게 규제 하겠다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적은 했었건만 … 최시중은 말한다. “처음 출범하는 방송을 나 몰라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조종동 채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맘놓고 장사하게 해 주겠다고.

반면 MBC와 KBS에 대한 최시중의 발언은 완전히 다른 톤이다.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파란색 — 한나라당 로고와 삼성의 색 — 으로 덧칠하고는 곧바로 “엄기영 사장의 진퇴를 포함해 방문진이 소신있게 해 나가라”며 MBC에 겁박의 끈을 켜다.

엄 사장 체제를 흔들며 MBC 내부의 위축과 분열을 유도하려는 포석을 깔고 KBS에 대해서는 이른바 ‘탈색론’을 들고 나섰다. “KBS를 틀면 색깔이 없는 뉴스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미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을 거의 제거한 KBS를 정권과 자본의 발표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요, 그들에게 불리한 사안들에는 기계적 중립·양시양비론을 사용해

여론을 호도하는 장치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KBS를 EBS와 묶어 공영그룹화하겠다”, “(MBC의 민영화를 전제로) 3개 민영 지상파방송의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고까지 나아갔다. 그 전체적인 의미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 터. 예의 공영방송법 — 공영방송은 전체 수입의 20퍼센트까지만 광고로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해, KBS는 수신료를 인상해 주는 대신 EBS와 묶어 관영화하고, KBS2의 광고를 떼어내 조종동채널이 먹고 살 광고물량을 확보해 주며, 현실적으로 광고를 포기할 수 없는 MBC를 자발적 민영화로 내모는 내용 — 이라는 노림수를 구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 민영방송들에게 수익에 유리한 민영 미디어법 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써 MBC의 자발적 민영화를 유도하며 지역 MBC와의 분열을 획책하는 — 민영 미디어법 허용이라는 흡수를 가시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하여 오래 전부터 꿈꿔 왔던 보수일변도의 1공영 다민영 체제를 기필코 완성하고자 말겠다는 것이다. 온갖 특혜로 무장한 조종동 종편채널이 앞장서고, 울며 겨자먹기로 민영화해 날개가 꺾인 MBC가 합류하며, 수신료 인상에 묵이 매인 관영KBS가 든든하게(!) 뒤를 받치는 semi-America형 여론독과점 체제. 최시중 발언들의 지향점은 바로 그것이다.

미국식 미디어 시스템 구축하기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라. 미국 미디어계의 실상이 과연 어떠한가?

미국의 미디어계를 지배하는 것은 5~6마리의 공룡이다. CNN, <타임>지와 <포춘>, 워너브러더스 등을 소유한 타임워너, ABC, ESPN, 히스토리채널, 월트디즈니 영화사 등을 소유한 디즈니, 폭스TV와 디렉TV, <워싱턴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21세기 폭스(영화사)를 지배하는 뉴스코퍼레이션, CBS TV, MTV, 파라마운트와 드림웍스 등을 거느린 비아콤, NBC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GE(제너럴일렉트릭) ….

그중 의제설정 면에서 이 거대 사족독점체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악명 높은 글로벌 미디어 제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이다. <Outfoxed: Rupert Murdoch's War on Journalism>이라는 다큐멘터리(최근 국내에서 Anti Fox라는 이름으로 소개됐음)에서 드러났듯 그 거대한 극우편향 선동기계는 “공정하고 균형잡힌”을 구호로 내세우며 진보 또는 자유주의적 인사들을 턱도 없이 흡입낸다.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은

징계를 받거나 해고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기괴한 사건들과 선정적 장면들을 극우적 선동과 버무려대는 폭스뉴스의 시청률이 CNN의 갑절이나 된다. 공영방송 PBS의 시청률은 1퍼센트에 불과하다. 시청자들은 끝끝 허를 차고 욕하면서 도 폭스뉴스를 보고, 폭스가 설정한 의제들이 다른 채널 뉴스의 준거가 된다.

이런 시스템에서 미국 사회의 소통이 질식됐고, 여론은 퇴행일로를 걸었다. 그 결과 이라크에서 단 한 개의 대량살상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제적 상식을 미국인 상당수가 여전히 모른다.

엔론, 월드컴 사태로 금융자본의 탐욕과 사기가 기승을 부려도 미국 언론들은 아무런 경고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증시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기 바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터진 후 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월가 금융자본들에겐 혈세가 바쳐져도 변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없다. 전 국민의 15퍼센트가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오직 제도권 밖의 언론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상황.

이것이 현 정권이 지향점으로 내세우는 미국 언론의 실상이다. 한 목소리로 친기업 가치를 옹호하며, (담세율이 유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세금폭탄’ 공세에 동조해 사회보장제도를 형해만 남게 하는 데 앞장 선 것이 바로 미국 미디어들의 한심한 현주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최시중 발언은 날치기한 미디어법을 발판으로 한발 한발 미국식 미디어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는 일련의 수순을 시사한다. 방송위원장 최시중은 그 프로젝트의 조율자로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럼으로써 자연사 위기의 조종동을 구하고, 그들과 국내외 자본을 결합시켜 1987년 이후 방송민주화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것. 철저적 민주주의라는 제약 때문에 완벽히 통제할 수 없었던 공영방송체제를 사실상 없애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최시중 씨가 말하는 1공영 다민영 (실질적으로는 1관영 = KBS, 다사영(多私營)= 조종동+대기업 채널, SBS, 민영MBC) 체제 구상이다.

조종동+대기업 채널들이 선봉을 맡고, 몇 년 후 재벌과 외국자본 들이 미디어계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보수우익 정권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한다는 사악한 그림. 탐욕스런 자본가들이 영웅으로 그려지며, 자본의 가치만이 드높이 찬미되고, 그에 따라 모든 사회개혁의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시중 씨의 발언에 분노하며 다시 투쟁의 의지를 다진다.



자이 자일스 옹파콘 칼럼

타이 역사의 후퇴를 보여 준 재판

자이 자일스 옹파콘 타이 출라롱코른대학교 정치학 교수 / 좌파 활동가

지난달 방콕 비밀 법정에서 다라니 차른초엥 실파쿨(‘다 토르페도’는 그녀의 별명이다)은 국왕모독죄로 18년형을 받았다.

이것은 타이가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 준 한 예일 뿐이다. 이 밖에도 타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붉은 셔츠를 입은 민주주의 수호 시위대의 평화적 집회를 막았고, 선출되지 않은 총리 아비싯은 군부를 부추겨 지난 4월 시위대를 공격하게 했고, 그 결과 시위대 일부가 숨졌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타이의 이른바 ‘인권 활동가’, NGO, 학자 들이 하나같이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국왕모독죄로 구금된 양심수들을 모른 채하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태도도 어이가 없긴 마찬가지다. 이 단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다 토르페도는 어떤 폭력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녀가 사람을 죽이거나 누군가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도 아니다. 다 토르페도는 대중 앞에서 당당히 연설하는 민주주의 수호 활동가다. 다 토르페도가 18년형을 받은 것은 단지 그러한 연설들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타이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군 장교, 국가 관료들은 온갖 특권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 타이 지배계급의 눈에 최악의 범죄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다 토르페도와 수위차 타코르 등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타이의 엘리트들은 우리가 바보이길 바란다. 그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국가와 종교, 왕에 충성하길 바란다. 지도자가 방귀를 뀌면 우리 모두 방귀를 뀌어야 한다. 지도자가 본

홍 셔츠를 입으면 우리 모두 분홍 셔츠를 입어야 한다. 우리는 지도자가 이 땅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어야 한다. 타이 엘리트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마치 별레처럼 기어다니길 바란다. 우리는 바보처럼 웃고 한 목소리로 “우리는 왕과 국가를 사랑한다”고 외쳐야 한다.

타이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 훌륭한데, 늘 지배자들이 부패하고 야만적인 것이 문제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시민이 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떠든다.

민주주의는 나무 위에 영글어 때가 되면 떨어지는 과일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 우리는 철창 안에 구금된 다 토르페도, 수위차 같은 양심수들을 잊어선 안 된다. 국왕모독죄 철폐를 위한 캠페인에 다 같이 나서자!

번역 조영훈 기자

논설

이명박 정부의 유화 제스처는 대중적 저항 때문

이명박의 지지율이 올랐다고들 한다. 원체 인기 없는 정부인지라 지지율의 소폭 상승조차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특히 반색하지만, 그 래 봤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0퍼센트를 조금 웃돌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현 정부의 앞날은 캄캄질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소폭 상승은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자기 정체성을 부분 포기한 결과다.

강부자 정권이 “친서민 행보”를 한다고 하고, 우파정권이 “중도 실용”을 말하며, 바로 얼마 전까지 냉전적 대북 정책을 고수하다가 은근슬쩍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개각에서도 문제투성이 ‘MB맨들’ 속에 한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정운찬을 총리로 내정했다.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던 이명박 정부가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강경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산참사 항의 운동, 반민주적 탄압 저지 운동, 쌍용차 노동자 점거 파업 등 저항 운동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로 엄청난 국가 탄압 속에서 한두 달에 몇 차례씩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런 시위와 저항이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급투쟁 상황을 호각지세로 만들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10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최장집 교수가 “이명박 정부를 온 힘으로 공격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약화됐느냐”고 반문하는 것(9월 1일 진보개혁입법연대가 주최한 강연회)은 그래서 다소 뜬금없다.

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악으로 규정하고 모든 걸 나쁘다”고 하는 식으로 “집중 공격”한 것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 보탬이 된 것처럼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실제로 잘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 세력의 막무가내 공격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다.” 최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이 이명박을 강하게 만든 셈이 된다.

그러나 이명박 지지율 일시 상승이 곧 이명박 정부가 강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명박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던 바로 그 요인 때문에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염원에 힘입어 대통령이 됐지만, 경제 위기는 여전히다. 경제 회복이 아니라 경기 하강 속도가 다소 둔화됐을 뿐이다.

IMF도 최근의 회복 상태에 대해 “성장이 실업을 줄일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동결(과 삭감)과 일자리 공격 때문에 노동자들은 소비를 자제할 것이고 그 결과 경제의 부양을 위한 수요를 제약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착실한 개인 소비자 확고한 기업 투자가 아니라 여전히 대규모 국가 개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전례 없는 경기 부양책들(4대강 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아마겟돈을 피하고자 한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이 치른다. 대규모 재정 적자 때문에 공공부문 지출, 특히 서민복지가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이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경제 위기에서 빠져 나오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의 해마에 맞아 삶이 부서지고 있다.

위기의 진정한 정치적 함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함께 장기적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혼돈의 시대가 열렸다는 점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분노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숨막히는 고통을 겪고 있다.

바로 이런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유화 제스처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결코 지배전략의 근본적 전환이 아니다. 이전과 같은 강경 탄압으로 얼마든지 선회할 수 있다. 주요 지배계급 분파들도 이명박의 자기 정체성 부분 부정 정책을 언제까지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보수 언론들은 “친서민”이 아니라 “친국민”(이때 국민은 지배계급 국민을 가리킨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발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유화 제스처는 정부의 강력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과 대중적 압력에 밀려 일시적·부분적 양보를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좌파는 벌어지는 투쟁들에 적극 개입하고 대중의 심리적 균형을 두려움에서 저항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 (주)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진중권 교수에 대한 비열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 지식인 진중권 교수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중앙대에 이어 홍익대까지 그가 강의하던 모든 대학에서 잇달아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특히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려 할 정도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대 당국은 사문화한 조항을 들어 진중권의 교수 자격 요건을 문제삼는다. 그러나 학생들이 지적했듯이 재임용 거부부의 진정한 이유는 정권과 총장을 신랄하게 비판한 ‘괘씸죄’에 있다.

중앙대 총장 박범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제자에게 판소리 공연을 시키고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한다”, “감칠 맛이 있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진 교수는 “학생을 판기 취급한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진 교수가 같은 대학의 총장을, 그것도 대선 때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 일원이었던 친정권 인사를 이처럼 속시원하게 비판한 것은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진 교수 탄압은 단지 중앙대 총장을 겨냥해 올바른 쓴소리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네 대학에서 모조리 강의권을 박탈당한 것이나, 우익들이 제기한 각종 재판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진 교수가 받는 탄압은 더 큰 정치적인 맥락이 있다.

눈엣가시

진중권 교수는 이명박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를 조롱하고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 왔다. 미네르바 때문에



지난해 5월 9일, 촛불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는 진중권 교수(왼쪽). 그의 이런 활동은 이명박 정부와 학교에겐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사진 출처 진보신당 웹사이트 사진게시판

회환보유고가 떨어졌다는 정부 발표를 “신춘문예갑”이라고 조롱하고, “이명박을 왜 2MB라고 하는지 알겠다. 2메가바이트” 하고 말할 때 많은 진보적인 청년들이 후련함을 느꼈다. 또한 진 교수는 직접 촛불시위에 참가해 생중계를 하고 대중강연에도 자주 참가하는 등 대중과 거리를 두지 않는 지식인이기도 하다.

이런 진 교수의 활동은 이명박 정권과

우파들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물론 진 교수 특유의 빈정거림이 같은 진보진영 내 좌파 단체 활동가들을 향한 때는 문제였다. 특히, 남한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투쟁의 중요한 일부로 헌신해 온 좌파 민족주의 활동가들을 북한 정권과 다를 없는 존재로 낙인찍거나, 촛불시위 때 수배와 탄압을 감수하면서도 운동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려 한

다함께를 맹비난한 것은 분명히 균형있는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바로 우파와 이명박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한 것 때문에 진 교수가 지금 탄압받는 것이므로 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 후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진중권 교수를 방어해야 한다.

이미 진 교수 방어를 위한 연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석훈 씨가 주도해 인문

사회과학 저자 5인이 진 교수 방어 성명서를 발표했고, 진 교수의 강의권을 박탈한 중앙대·한예종·홍익대에서도 학생들이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보적 지식인마저 정권 앞에 무릎꿇리려 하는 이명박의 비민주적이고 비열한 탄압은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한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중앙대는 모든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앙대학교 학생 4명이 진중권 교수의 해임에 반대해 총장실로 항의방문 갔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총장은 징계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면담을 미루고 상벌위원회를 먼저 소집했다. 대화하는 척 하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동시에 학교는 ‘도의적 사과를 하면 징계를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들을 징계하고 사

과를 요구할 근거는 전혀 없다. 학생들은 비서실의 허락을 받아 총장실에 들어갔고, 진중권 교수 해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 몇 분간 색종이를 붙이고 나왔을 뿐이다.

괘씸죄

그러나 학교는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협박하며 문자메시지로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

은 총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은 학생을 징계 대상자에 올렸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또, 처음에는 “무단침입”과 “점거”가 징계사유라더니, 근거가 없자 이제는 빨간 색종이가 “총장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노골적으로 ‘괘씸죄’를 적용하려 한다. 이번 징계는 결국 새롭게 들어선 두산재단이 ‘학교를 비판하면 징계당한다’는 본보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며 학생들은 어떠한 사과도 할 이유가 없다. 사과를 거

부한 학생의 말처럼 오히려 사과해야 할 쪽은 절차로나 내용으로나 부당하게 징계를 시도하며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학교 당국이다.

여제자를 한나라당 의원모임이라는 사적인 자리에 불러 공연을 시키고 “감칠맛이 난다”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올바르게도 이를 비판하는 쓴소리를 한 진중권 교수를 내쫓은 중앙대 총장 박범훈은 학생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학생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학교측의 사과 요구를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학교가 끈질기게 사과를 요구하자, 징계 대상자들의 입장 차이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징계 대상자인 대학원생 최영하 씨는 올바르게도 상벌위원회 출석과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근거 없이 징계를 시도하는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그의 글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징계 대상자들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고

사과할 수 없”다면서도 아쉽게도 동시에 “그러나 빨간 색종이를 총장 퇴진 요구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음에 대한 도의적 사과”를 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했다. 징계 대상자는 아니지만, 징계대책위를 주도한 ‘대학생 다함께 중앙대 모임’ 회원도 동시에 이 견해를 지지했다(현재는 당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비판하며 어떠한 사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총장 퇴진 요구를 한

적이었다. 게다가 학교가 잘못하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총장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당성

단호하게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최영하 씨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형식이든 사과를 하면 “교수도 없고, 수업권도 없고, [투쟁의] 정당성도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데 이를 악용할 수 있다. 그리 되면 징계 대상자들을 옹호한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이 반성했다’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 하고 사기저하할 수 있다.

게다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한 학생만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벌써부터 사과하지 않은 학생만 징계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징계 대상자들은 지금이라도 “도의적 사과”를 철회하고, 어떠한 조건

도 달지 않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학교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징계 대상자 4명이 단결해야 한다.

진중권 교수를 내쫓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려 하는 중앙대 당국에 맞선 정당한 항의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지지를 확산시키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려면 어떠한 사과도 하지 말고 굳건히 정당성을 방어해야 한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중앙대 당국의 징계 시도를 규탄하는 중앙대 학생들의 집회

사진 제공 중앙신문